

보고서 발간번호	11-1060100-000066-14
----------	----------------------

제6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이행보고서

여성가족부

제6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이행보고서

여성가족부



목차

Introduction

제1조

1.1 차별의 정의	1
1.2 간접차별의 구체화	2

제2조

2.1 새로 제정된 법률	2
2.2 개정된 법률	3
2.3 차별구제기구의 개편	6

제3조

3.1 정책의 성 주류화의 도입	6
3.2 정책의 성별 영향분석 평가시스템 도입	6
3.3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강화	7
3.4 성 인지적 예산분석	8
3.5 성 인지적 통계	8

제4조

4.1 여성의원 공천 할당제	9
4.2 공무원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9
4.3 여교수 채용목표제	9
4.4 여교원 관리직 임용 확대	10
4.5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10

제5조

5.1 양성평등의식 제고 및 양성평등문화의 확산 기반 마련 노력	10
5.2 성희롱 예방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11
5.3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12

제6조

6.1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 수립	12
6.2 성매매피해여성 및 탈성매매여성에 대한 보호지원체계 강화	13

6.3 성매매방지 홍보, 연구	14
6.4 성매매 수사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여성 인권보호 및 성매매 단속	15
6.5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활동 강화	15
6.6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16

제7조

7.1 정치분야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 관련법 개정	16
7.2 정치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17
7.3 정부 자문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17
7.4 정부 고위직 여성임용 확대	17
7.5 군내 여성간부 확대계획	18

제8조

8.1 국제회의의 정부대표단 구성	18
8.2 국제기구 진출	18
8.3 외교부문 여성인력 진입 확대	18

제10조

10.1 양성평등교육	19
10.2 학교 내 성교육과 보건교육	21
10.3 여학생 이공계 진로 촉진	21
10.4 성별 학업성취도 격차	22

제11조

11.1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수립(2003~2007년)	22
11.2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도입	23
11.3 여성가장실업자훈련 내실화 방안 마련	24
11.4 모성보호의 확대	24
11.5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 확대	25
11.6 보육정책의 체계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5
11.7 여성장애인 취업 지원	25

제12조

12.1 여성의 건강 현황	26
12.2 제왕절개분만 억제	26
12.3 모자보건	27

12.4 저출산 문제 대응	27
12.5 여학생흡연예방	27
12.6 중장년기 여성건강 정책	28
12.7 취약계층 여성의 건강증진	28
12.8 여성건강 관련 인프라 구축	28

제13조

13.1 국민연금과 여성	29
13.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	29
13.3 여성의 탈 빈곤을 위한 정책	29
13.4 저소득층 여성 창업지원을 위한 응자 및 각종 신용사업	30
13.5 모·부자복지법	30
13.6 여성 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30
13.7 문화정책의 성주류화	30

제14조

14.1 『여성농어업인육성법』과 여성의 농업정책 의사결정 과정 참여 증대	31
14.2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	32
14.3 여성농업인정책 관련 예산	32
14.4 여성 농림어업인의 보건복지 증진 및 모성보호	33
14.5 여성농업인센터의 확대 설치	33
14.6 여성농업인의 교육기회 확대	33
14.7 협동조합 및 자조집단의 결성·참여	34
14.8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 경감을 위한 각종 보조기구 개발과 시범 사업	34

제15조

15.1 모의 친생부인의 소 인정	34
--------------------------	----

제16조

16.1 호주제도의 폐지	34
16.2. 자의 성 결정	35
16.3 재혼금지기간 삭제	35
16.4 부의 인지	35
16.5 이혼가정의 양육비 지급이행 확보방안	36
16.6 부부재산제	36

부 록

〈 표 4-1 〉 대학의 여교수 및 여학생 비율	37
〈 표 4-2 〉 여성 교장·교감 현황	37
〈 표 5-1 〉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육시행 성과	38
〈 표 5-2 〉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실태 점검결과	38
〈 표 5-3 〉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발간 성과	38
〈 표 5-4 〉 성인의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시간(요일평균)	39
〈 표 6-1 〉 성매매 피해 및 탈성매매 여성 지원시설 현황	39
〈 표 6-2 〉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39
〈 표 6-3 〉 가정폭력범죄 검거·조치 현황	40
〈 표 7-1 〉 국회의원 수	40
〈 표 7-2 〉 제2,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당선자 수	40
〈 표 7-3 〉 정부내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목표율(2003-2007)	41
〈 표 7-4 〉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2004. 12. 31 현재)	41
〈 표 7-5 〉 여성장관 현황	41
〈 표 7-6 〉 여성관리직(5급 이상) 임용 연도별 추진실적	41
〈 표 7-7 〉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2003. 12. 31 현재)	42
〈 표 7-8 〉 연도별 여성공무원 현황	42
〈 표 8-1 〉 외무고시 여성 합격자 현황	42
〈 표 10-1 〉 성교육 연간계획 수립 현황(2004년)	43
〈 표 10-2 〉 전공분야별 여학생 비율(2002~2004)	43
〈 표 10-3 〉 각급학교 성별 진학률	44
〈 표 10-4 〉 성별, 계열별 고등학생 분포 및 여학생비율	44
〈 표 10-5 〉 성별 학위 취득자수 및 인구 만 명당 학위 취득자	45
〈 표 10-6 〉 각급학교 성별 학교유형	45
〈 표 10-7 〉 장학금 급여율과 학비 감면율	46
〈 표 10-8 〉 준학교의 여성 비율	46
〈 표 10-9 〉 방송통신대학과 산업대학(개방대학)의 여학생 비율	47
〈 표 10-10 〉 독학학위 취득시험 여성 현황	47
〈 표 10-11 〉 체육교육에서의 여학생 비율	47
〈 표 11-1 〉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48
〈 표 11-2 〉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48

〈 표 11-3 〉 산업별 여성취업자 현황	49
〈 표 11-4 〉 직종별 여성취업자 현황	49
〈 표 11-5 〉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2004년)	50
〈 표 11-6 〉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 실적	50
〈 표 11-7 〉 연간 평생학습참여율 및 교육이수 일수 (2004년)	50
〈 표 11-8 〉 연도별 남녀 평균 임금수준 및 임금격차	50
〈 표 11-9 〉 모성보호급여 실적	51
〈 표 11-10 〉 연령별 보육 아동수 및 대기아동수* (2004년)	51
〈 표 11-11 〉 연도별 직장보육시설 현황	52
〈 표 11-12 〉 여성가구주 현황	52
〈 표 11-13 〉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 장려금 차등 지원	52
〈 표 12-1 〉 성별 10대 사망원인 (2002)	53
〈 표 12-2 〉 의료서비스 이용률 (2003)	53
〈 표 12-3 〉 HIV/AIDS 감염자 현황	54
〈 표 12-4 〉 HIV/AIDS 여성 감염자 연령별 현황 (2004년)	54
〈 표 12-5 〉 유배우 부인의 연령별 피임률 (2003년)	54
〈 표 12-6 〉 유배우 부인의 1000명당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 (2002년)	54
〈 표 12-7 〉 연도별 제왕절개분만을	54
〈 표 12-8 〉 임신부 영유아 등록관리 및 건강진단	55
〈 표 12-9 〉 성별 연령별 흡연율 (2004년)	55
〈 표 12-10 〉 흡연시작 연령 (2004년)	55
〈 표 12-11 〉 노인건강 진단 실적 (2004년)	55
〈 표 13-1 〉 가입유형별 국민연금 여성가입자 현황	56
〈 표 13-2 〉 국민연금 수급 현황	56
〈 표 13-3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별 일반 수급자 현황	57
〈 표 13-4 〉 국민기초보장제도 연령별 일반 수급자 현황	57
〈 표 13-5 〉 가구유형별 일반 수급자 현황	57
〈 표 14-1 〉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추이	58
〈 표 14-2 〉 여성농업인 교육실적	58
〈 표 14-3 〉 여성의 농협참여 추이	59
〈 표 14-4 〉 농촌여성 생활환경 개선사업 실적	59
〈 표 14-5 〉 연도별 농가도우미 지원실적	59
〈 표 14-6 〉 여성농가*인구	59

INTRODUCTION

이 보고서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들의 추진 현황과 성과들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인 것은 정부 정책에 있어서의 성 주류화 도입이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정책에서의 성별 영향평가 분석과 성 인지적 예산분석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정책입안 및 집행단계에서 성 인지 인식이 제고되었으며, 정치 및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여성지위 향상을 위하여 각종 법제가 정비되었고, 여성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졌다.

한국은 1984년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당시 제9조와 제16조의 c, d, f, g조항을 유보하였으나, 현재는 가족성에 대한 제 16조의 g항만 유보하고 있다.

이 보고서 작성에는 여성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관련된 정부 각 부처가 참여하였으며,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진이 집필을 담당하였다. 또한 여성단체의 의견 수렴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여성부와 여성가족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부가 2005년 6월 개편된 것으로, 정책추진 시작 시점에 따라 여성부 또는 여성가족부로 기재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 공식 출범 이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성부(현재 여성가족부)로 기재하였다.

1.1 차별의 정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행위’를 인간의 평등권침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1.2 간접차별의 구체화

고용과 관련된 ‘차별’의 정의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남녀고용평등법, 1989년 해당조항 신설). 동 법률에서는 간접차별도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도 이를 차별로 보도록 하였다.

2005년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은 여성 고용이 저조한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고용목표를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의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고용 관련 간접차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본문 11.2 참조).

제2조

제6차 이행기간에 제개정(制改定)된 여성관련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다.

2.1 새로 제정된 법률

2.1.1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력을 양성,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에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18일 제정된 법률이다.

주요내용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분야의 채용 목표비율을 설정하는 등 적극적 조치와 공공기관에 여성과학기술담당관을 지정, 채용 촉진 및 지위향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본문 4.5 참조).

2.1.2.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2004년 2월 9일 공포, 시행일은 2005년 1월 1일)은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한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본문 3.3, 12.4 참조).

2.1.3.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2004년 1월 29일 공포, 시행일은 공포후 6월)은 공중화장실 설치에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와 화장실 사용시간 차이 등을 고려하는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2.1.4. 성매매방지관련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4년 3월 22일 공포, 시행일은 공포 후 6월)은 성매매 행위를 방지하고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성매매피해자 및 행위자를 위한 지원시설 활성화하고 의료지원, 취업 교육, 법률지원 등으로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다(본문 6조 참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2004년 3월 22일 공포, 시행일은 공포 후 6월)은 성매매 공급자와 중간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해 인신매매 처벌, 성매매 강요·알선 등 행위에 대하여 형태별로 다양화하여 형량을 강화하는 등 우리사회의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와 성매매를 근절한다(본문 6조 참조).

2.1.5.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일은 2005년 1월 1일)은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명과학기술을 질병치료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여성 관련 내용은, 인간 복제를 위한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유지 또는 출산, 임신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 및 매매의 목적으로 정자·난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1.6.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2004년 3월 5일 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산촌, 어촌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본문 14.4 참조).

2.1.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동 법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교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과 자녀양육을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하며 나아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본문 12.4 참조).

2.2 개정된 법률

2.2.1.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2002년 1월 19일 개정·공포)은 여자공무원이 3세 미만인 자녀의 양육과 임신·출산으로 휴직을 가능하게 하였고, 휴직기간이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로 개정되었다. 또한 전체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본문 11.4 참조).

2.2.2.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12월 11일 개정·공포)은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각 부처에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 것이다(본문 3조 참조).

2.2.3. 고용 관련 법 개정

근로기준법(2003년 9월 15일 공포)은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고 근로시간 및 휴가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한 것이다. 여성 관련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던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제도를 무급화 하였다.

군인사법(2004년 1월 20일 공포·시행)은 여자군인이 3세미만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출산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본문 11.4 참조).

한편, 『고용정책기본법』개정(2005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고용 및 직장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별금지 사유에 ‘혼인 또는 임신’을 추가하여, 모집·채용요강 및 채용관련 서류일체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성별, 혼인·임신여부 등의 기재를 금지하였다.

2.2.4.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2002년 12월 11일 개정·공포)은 제명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로 바뀌었다. 이 법은 현행 법률이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에 한정하고 있어 이를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역사적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전시 및 기념사업 등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사실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함이다.

2.2.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2003. 12. 11 개정)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도록 하고,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강간·강제추행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비디오 등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6. 가정폭력 관련 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02. 12. 18. 개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검사는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던 것에서 그 임시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본문 6.6 참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4. 1. 20. 개정)이 종전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관리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로 이관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중에서 가정폭력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경우 등에는 구상권 행사를 아니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였다(본문 6.6 참조).

2.2.7. 모자복지법

모자복지법(2002년 12월 18일 개정·공포)은 제명이 모·부자 복지법으로 바뀌었으며, 이전에 모자가정에만 국가 등의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하여왔으나 이를 부자가정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본문 13.7 참조).

2.2.8. 교육 공무원법

교육 공무원법(2003년 7월 25일 공포, 공포 후 3월 후 시행)은 여교수의 임용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 인사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을 일정비율 포함하고, 국·공립대학 장은 임용계획을 신규채용뿐만 아니라 전직·전보·겸임 등 모든 경우로 확대하였다(본문 4.3 참조).

2.2.9. 세법 관련 법 개정

부가가치세법(2004년 1월 1일 시행)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본문 13.4 참조).

2.2.10. 단기사관학교설치법

단기사관학교설치법(2004년 1월 20일 공포·시행, 2005년에 육군3사관학교법으로 개편)의 개정으로 여성들에게도 단기사관학교(현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자격을 부여하였다. 한편, 2004년 개정된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서는 종전 미혼여성에게만 부여되었던 입학자격을 미혼 남녀로 확대하였다.

2.2.11.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은 두 차례 개정되었다. 영유아보육법(2004년 1월 29일 공포, 공포후 1년 시행) 첫 번째 개정은 민간보육시설 외에 부모협동보육시설을 새로이 두고, 보육교사에 대해 1-3급의 자격증제를 실시, 설치기준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였다. 두 번째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2004년 12월 31일 공포, 2005년 1월 30일 시행)은 보육시설 설치기 준 및 보육 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있어 농어촌지역을 추가하였다(본문 11.6 참조).

2.3 차별구제기구의 개편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1999년 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었던 여성부 산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의 업무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2005년 6월 23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성희롱 등의 남녀차별의 구제에 관한 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이로써 다양한 차별 사유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중복차별과 여러 형태의 차별에 대해 통일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은 『국가 인권 위원회법』5조에 11인 중 4인 이상을 여성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2005년 12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은 4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된 2001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룬 차별사건은 총 4,567건으로 이중 성차별 108건, 성희롱 43건,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 12건, 용모신체조건에 의한 차별은 45건이다.

3.1 정책의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의 도입

여성가족부에서 총괄조정하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은 실질적 남녀평등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면서, 여성정책을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넘어 남성을 변화시키고 남녀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여성정책의 기본전략으로 성 주류화를 명시하여, “정부정책에 양성평등 관점의 통합”을 10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여성정책 추진기구 확대 및 성 인지적 예산 도입을 위한 여건조성,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 분석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을 세부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성 주류화 전략과 함께 여성 가족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partnership)을 추진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10대 핵심 정책과제는, 1)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통합, 2)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3)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4)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 5) 사회 문화 분야의 여성참여 확대, 6) 평화, 통일, 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 확대, 7)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8)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9)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조성, 10)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이다.

3.2 정책의 성별 영향분석 평가시스템 도입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으로 성 인지적 정책 형성 및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수립·시행과정의 성별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여성부(현재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2004년에는 성별 영향평가 지침이 마련되고, 주요 정책(9개 기관 10개 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05년부터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격적으로 동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2005년 12월 현재 전체 57개 기관 중 총 55개 기관이 80개 과제에 대해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각 기관별로 성별 영향평가 담당 부서가 지정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성별 영향평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여 평가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성별 영향평가는 크게 정책 담당 공무원이 직접 평가를 수행하는 자체 평가와 외부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평가를 수행하는 심층 평가로 나뉜다. 심층 평가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한 정책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총 7개 기관의 8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기관별 2005년 성별 영향평가 결과는 연말에 종합·평가하여 모범 사례를 발굴하도록 하였다. 한편, 성별 영향평가 결과 환류를 제도화하기 위해 2006년도 예산이 성별 영향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편성되도록 하였으며, 「정책품질관리」의 점검 지표로도 포함하였다.

3.3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강화

2002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여러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관련 업무 및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장들이 참여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가 2003년 마련되었다.

2003년부터는 45개 중앙행정기관에 기획관리실장급(deputy ministerial level)을 여성정책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해당기관의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을 종합·조정하고 추진실적을 점검 하며, 정책의 성별 영향분석 평가업무와 해당기관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정책책임관 제도는 1998년 6개 부처에 설치된 여성정책담당단과 실과 더불어 각 부처의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1년 신설된 여성부는 2005년 6월 23일 여성정책과 함께 통합적인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총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어, 보건복지부가 관장해오던 『건강가정기본법』, 『모부 자복지법』을 이관 받아 가족보호 및 지원정책 수행(가족해체·이혼·가정갈등 예방 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가족정책국과 보육재 정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특히 보육문제와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국가적 전략을 연계하기 위하여 2004년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현재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보육 정책은 여성부(현재 여성가족부)의 중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육예산은 2004년 4,050억원, 2005년 6,001억원, 2006년 7,9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04년 대비 95.3%가

증가하였다.

1994년부터 운영되었던 국회 여성특별위원회는 2002년 3월 여성가족부 업무를 다루는 상임 위원 여성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여성위원회는 여성특별위원회와는 달리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들에 대한 법률안 제안권과 의결권을 갖고, 여성가족부의 예산·결산 및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권,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조사권을 행사한다.

공공부문을 주축으로 양성평등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 2003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설치하여 다양한 기관을 통해 추진해오던 양성평등교육을 체계화하고 전문화하였다(본문 5.1 참조).

3.4 성 인지적 예산분석 (gender budget analysis)

한국에서 성 인지적 예산 분석이 시도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특별위원회(2001년부터 여성부)의 예산을 중심으로 여성관련 예산을 분석하고, 신규 또는 확충되어야 할 예산을 포함하여 중앙정부의 여성관련 예산요구안 및 여성부 예산요구안으로 제시해 왔다.

「200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을 2003년 투자재원 배분 방향의 하나로 포함하였다. 이후 2004년도 지침에는 “보육서비스 확충 등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가, 2005년도 지침에는 “보육 지원”이 주요 재원 배분 분야로 명시되고 있으며 2006년 지침에는 “성별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예산 요구”라는 내용이 새로이 포함되어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예산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여성부(현재 여성가족부)는 2003년 「성 인지적 예산 분석 지침 수립 방안 연구」를 통해 예산 분석 도구 및 절차를 연구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농림부 등 4개 기관의 예산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시범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2001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여성정책 관련 예산을 파악하여 주요 여성정책 관련 예산 내역과 전체 예산 규모의 변동 사항을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는 「여성백서」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3.5 성 인지적 통계

성별 분리통계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

이 2002년 12월에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성별 분리통계의 실태 파악과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주요 통계의 성별 분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 인지적 통계 작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부는 2004년에 성 인지 통계혁신전략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가족, 여성폭력, 가계경제, 복지통계에 대한 통계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4.1 여성의원 공천 할당제

2002년 3월과 2004년 3월 개정된 정당법 제31조에는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50% 이상 여성공천 할당제가 도입되었다. 또한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광역의회 의원 후보로 30% 이상 여성공천을 권장사항으로 하고, 이를 준수한 정당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본문 7.1 참조). 이와 같은 정당법 개정에 따라 2004년 4월 실시한 제17대 총선에서 여성은 비례대표에서 29명, 지역구에서 10명으로 총 39명(13%)이 당선되어 제16대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5.9%)에 비해 대폭 확대되었다(본문 7.2 참조).

4.2 공무원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2002년 여성채용목표제가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공직 내 양성평등 제고를 위해 그동안 실시했던 여성채용목표제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하여 2003년부터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2003년-2007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공무원 채용시 어느 한쪽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 미만일 때 합격선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목표비율만큼 추가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한 결과, 2003년 전체 합격자의 평균 여성비율은 39.3%였으며, 2004년 40.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4.3 여교수 채용목표제

정부는 양성평등 이념에 기초한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의 하나로 2003년 6월 국립대학에 200명의 여교수를 별도 정원으로 배정하였다. 이어 2003년

7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이루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4년제 국공립 대학은 3년 마다 교원 임용 시 남녀 평등을 위한 임용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교수 확대를 위한 대학의 적극적 조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자문기구로서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여교수 채용목표제의 도입 이후, 2001년 8.8%, 2002년 9.1%였던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이 2003년 9.2%, 2004년 9.97%를 기록하였으며, 2005년 10.7%의 비율로 매년 증가하였다(〈표 4-1〉 참조). 여교수 특별 배정인원 200명 중 2005년 9월 현재까지 159명이 임용됐으며, 여교수 비율이 20% 미만인 과학기술분야에 72명, 사회계열에 37명의 여교수가 대거 신규 채용되었다.

4.4 여교원 관리직 임용 확대

초·중등학교의 교장·교감의 여성 임용 확대제도가 2001년부터 도입되어 추진 중이다. 25년 이상 근무한 여교원 비율이 28.5%인 반면, 여성 교장·교감 비율은 10.6% (2004년 4월 기준)에 불과한(〈표 4-2〉 참조) 교육부문의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여, 교육부문에 여성 관리직 진출 확대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일률적인 제도 도입보다는 학교별, 시·도별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단계적 실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여교원 관리직 임용의 성과는 2년 마다 실시되는 시·도 교육청의 평가항목에 반영되고 있다.

4.5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2001년 도입된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는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2003년 6월 시행)’으로 법제화되었다. 이 제도는 잠정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2001년 제도 도입 시기에는 2003년까지 여성을 10% 채용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으나 2010년까지 20%, 최종 30% 달성으로 목표를 재설정하였다. 적용대상 역시 확대되어,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되던 것이 2003년 국공립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의 연구소 및 국공립 이공계대학 등 총 99개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5.1 양성평등의식 제고 및 양성평등문화의 확산 기반 마련 노력

2003년 3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설치로 공무원, 정부자문위원회 위원, 여성단체, 군인 및 경찰, 교직원,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정부산하기관 및 공공기업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성 인지력 향상 및 성 인지 정책분석 등의 전문적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2004년부터는 온라인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한 해 동안 총 3,575명이 수강하였다.

정부는 남녀차별금지정책과 양성평등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TV, 라디오, 옥외전광판, 지하철, 잡지, 포스터 등을 통한 대중적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매년 여성주간(7.1~7.7) 행사 개최, 남녀 평등상 시상 등을 통해 양성평등한 삶의 모델을 발굴하였다.

특히, 성차별의식의 개선과 양성평등문화의 정착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대중매체에 대해서는 2001~2003년에 걸쳐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방송과 광고의 성 차별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하고, 모니터 결과를 방송사와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하였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방송법, 방송심의에관한규정 등을 통해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대중매체 역할 강화 지원을 위해서는 방송작가 워크숍(2002년), PD포럼(2003년)을 개최하였고, 2004년에는 남녀평등 우수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였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문화산업·문화미디어·관광·체육 등 분야에서 양성평등관점이 통합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양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를 2005년 10월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양성평등문화정책의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그 성과에 관한 분석 및 평가 등에 대해 협의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5.2 성희롱 예방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양성이 평등한 사회적 인격체로 인정되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성희롱 방지대책을 추진해왔다. 성희롱 방지대책이 모든 기관에 정착되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주안점을 두고, 2001년 제정된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을 2002년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기관별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및 전담창구 설치, 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을 의무화하였다. 2003년에는 공공단체의 범위에 포함된 공직유관단체 334개를 대상으로 남녀차별 및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04년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2004년에는 초·중·고등학교 남녀차별 및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1999년 제정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2005년 5월 폐지되었으나, 성희롱예방교육과 성희롱방지를 위한 조치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동 법률의 조항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표 5-2〉와 〈표 5-3〉참조).

성희롱 방지대책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결과 2003년 이후 성희롱예방조치실적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의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성희롱고충 전담창구나 고충상담원을 지정하고, 자체성희롱예방실시지침을 제정하는 기관이 늘어나는 등 성희롱예방대책이 정립단계에 진입하였다.

공공기관의 성희롱방지조치실적 평가관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희롱예방교육 자료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성희롱예방종합관리시스템을 2005년 개발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상의 성희롱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첫 단계로 2004년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성희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5.3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2005년 새로이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적인 가정형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각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정부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가족생활교육·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 성인여성의 1일 가사노동 행위비율은 91.9%로 남성의 49.0% 보다 42.9%p 높고 1일 가사노동 평균시간도 여성이 3시간58분으로 남성의 1시간11분에 비해 2시

간47분 길다(〈표 5-4〉 참조).

여성부(현재 여성가족부)는 부부교육을 통한 이해증진 및 가족안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예비부부, 결혼초기부부를 대상으로 ‘평등가족실천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예비부부 및 결혼초기부부 등 총 544쌍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그 중 장애인 부부와 농민 부부를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2005년에는 2004년 교육운영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6월부터 10월까지 총 25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6.1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 수립

정부는 성매매 문제에 있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제거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2003년 6월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적인 ‘성매매방지기획단’을 설치하였다. 동 기획단의 성과로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에 관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마련되어 2004년 9월 시행되었고, 이의 시행을 위한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은 성매매방지를 위한 성매매 예방 관련 홍보, ‘성매매피해여성 등’(성매매 피해여성과 탈 성매매를 희망하는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 지원을 포함한 각 정부부처별 소관과제를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방지기획단은 2004년 11월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으로 전환되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2004년 3월 공포되고 9월부터 시행되었다. 두 법률은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성매매를 완전 근절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임을 재확인하고 성매매를 알선행위가 존재하는 3자관계로 재규정하여 성매매로 막대한 이득을 얻는 성매매알선행위를 중점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개념을 도입하여 성매매피해자(victims of forced prostitution)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였다. 자발적 성매매자에 대해서는 범죄행위의 성격, 동기 등을 고려하여 성매매 장소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 상담위탁, 치료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성구매 초범 남성에게 기소 대신 재범 방지 교육을 받게 하자는

취지로 2005년 8월부터 ‘존 스쿨(John School)’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동 교육은 남성들에게 성매매의 범죄성과 반인권성을 인식시켜 주기 위하여 성매매특별법의 입법취지, 성구매가 사회와 가정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대한 강의로 진행된다.

6.2 성매매피해여성 및 탈성매매여성에 대한 보호지원체계 강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성매매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성매매피해여성 등’을 위해 상담, 지원시설 제공,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다양한 보호 및 자활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강화하였다(〈표 6-1〉 참조). 이를 위하여 정부는 2004년 복권기금에서 39억원을 투입하여 ‘성매매 피해여성 등’에 대한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성매매 피해여성 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 상담소(이하 상담소)」에서 종사하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일정시간 이상의 상담원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2004년 11월 이후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2005년 8월말 현재 총 16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지원시설에서는 2004년도 5,856명, 2005년 상반기 4,185명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였고, 2004년도 2,530건, 2005년도 상반기 1,920건의 법률지원을 실시하였으며, 2003년 9월부터 2005년 8월말까지 4,023건 1,411명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지원하였다.

정부에서는 상담소를 설치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성매매 업소에 대한 현장방문 등 77,912건의 상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30,997명에게 심리정서 지원, 시설연계, 법률 및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하였다. 또한 자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동작업장 운영 등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 및 자활지원의 모델을 개발을 추진했다.

2004년 11월에는 부산, 인천 지역의 집결지역 성매매여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2005년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지역을 9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성매매 집결지역 자활지원사업에서는 상담을 통해 탈 성매매 의지가 검증된 여성에게 생계비와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05년 8월까지 2개의 시범사업지역에서 총 349명의 여성이 상담지원을 받았으며, 연인원 1,890명(월평균 210명)에게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고 의료지원(1,731명), 법률지원(29명), 직업훈련(424명)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직업훈련 등을 통한 창업여건이 조성된 ‘성매매 피해여성 등’에게 1인당 3,000만원까지 무이자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형태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총 32개 업체 41명에게 지원하였고 2005년 9월말 현재 19개 업체, 22명이 사업을 운영중이다.

‘성매매 피해여성 등’의 경우 신용불량문제로 인하여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조하여 2005년부터 신용불량문제 해소를 위한 상담 등을 지원하였으며, 86명에 대하여 신용불량 상태를 해제하였고 87명 상환기간 유예, 88명 이자면제 조치를 취하였다.

시설에 입소한 ‘성매매 피해여성 등’이 자격증 취득 등 자립할 수 있는 기능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퇴소 후에 거주할 공간이 없어 다시 성산업에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 퇴소 후 자활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일정기간 주거를 제공하는 그룹홈 제도를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12월 현재 4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한편, 예술흥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해서 성매매로 유입된 외국인 여성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여, 강제퇴거조치를 유예하고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쉼터 2개소를 시범운영하고 상담·본국으로의 귀국 지원 등을 제공하였다.

6.3 성매매방지 홍보, 연구

성매매방지기획단이 출범한 2003년에는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TV광고를 제작하여 방송하는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전 국민 성매매방지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고,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및 시행을 계기로 성매매방지종합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성매매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실시, 성매매방지법률 안내 책자 및 리플렛 제작·배포, 오피니언 리더에 대한 정책자료 제공 등이 이뤄졌다. 한편 탈성매매 여성자활사례집과 홍보 리플렛을 제작·배포하여 성매매방지법과 정책에 대해서도 널리 알리고 있다. 2005년에는 20~30대 남성을 주요 타겟으로 한 성매매방지 홍보인 ‘화이트타이 캠페인’을 실시하였는데, 정부기관 최초로 티저광고방식을 활용하여 캠페인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였고 웹사이트(www.whitetie.co.kr)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감성에 호소하는 홍보를 실시하였다.

실제적인 성매매방지 정책 수립을 위해 「탈 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프로그램 연구(2002)」, 「성산업규모 및 성매매 실태에 대한 전국조사(2002)」, 「외국인 성매매 실태조사(2003)」 등 성매매 방지를 위한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6.4 성매매 수사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여성 인권보호 및 성매매 단속

경찰청에서는 성매매 범죄 수사 및 단속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여성 인권보호를 위해 집결

지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관할하는 128개 경찰서 담당 경찰관 534명 중 356명 (66.7%)을 여성으로 교체하였고, 경찰서 여성 상담실을 ‘성매매피해여성 상담 및 조사실’로 개편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성매매피해여성 등’의 긴급구조 요청이나 피해신고접수 등을 한 곳에 일원화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지원센터 신고전화 117을 개통·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 지방청에 성매매 수사 전담반을 신설하였다.

성매매방지법시행 이후 1년간 경찰청은 성매매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16,260명을 검거하였으며 이중 남성이 11,474명, 여성이 4,786명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하여 성매수납에 대한 검거비율이 34.2% 증가하고 여성은 12.2% 감소한 것이며, 경찰청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성매매 알선업의 조직화가 차단되고 성매매 행위가 위축되어 가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성매매 행위가 범죄라는 국민의식이 점차 자리 잡아 가고 있다.

6.5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활동 강화

정부는 강간 등 성폭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요발생 시간인 새벽 및 야간에 주택가 및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순찰 등의 예방 및 검거활동을 전개하였다. 성폭력 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2004년 한 해 동안 전년대비 7.6% 증가한 11,223건을 기록하였다(〈표 6-2〉 참조).

한편, 가정폭력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과, 가정폭력은 가정내 문제가 아닌 범죄행위라는 국민들의 인식전환으로 2004년에는 전년대비 14.4% 감소한 15,208명의 가정폭력사범을 검거하였으며 원활한 가정 재건을 위해 검거사건의 18.8%를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하였다(〈표 6-3〉 참조).

2002년 12월 18일 일부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동 법의 목적을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에서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동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가정의 원상회복에만 치우치지 말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경각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하였다(2.2.6 참조).

6.6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2002년 인신매매 관련 장관급 지역회의(발리), ASEM 여성 및 아동인신매매 방지 세미나(방콕), 2005년 OSCE-태국 인신매매방지회의에 참석하는 등 국제회의 참가를 통해 성매매

및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여성부(현재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2003년부터 3차례 걸쳐 국제인신매매방지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 인신매매의 예방(2003), 피해자보호(2004), 처벌(prosecution)(2005)을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는 인신매매 척결을 위한 국가간 협력강화 및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처방안 등이 모색되었다.

7.1 정치분야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 관련법 개정

2002년 이후 정치분야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이 획기적으로 개정되었다. 2002년 3월 『정당법』개정으로 정당은 비례대표 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선거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비례대표 선거구 시·도의회의원 선거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또는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선거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동 법률의 2004년 개정에서는 정당은 비례대표 전국선거구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2년 3월 7일 개정·공포)은 정당이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등록 시 여성후보자 추천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년 3월 12일 개정)은 지역구 30% 이상 여성 공천 비율을 준수한 정당에 대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또한, 정당으로 하여금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10%를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한 결과 여성 리더십 센터가 개원, 운영되는 등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정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7.2 정치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국회의 여성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제16대 국회(2000-2004)는 16명(5.9%), 제17대 국회(2004~2008)에서는 41명(13.7%)으로 증가하였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의원은 39명(13.0%)이었으나, 이후 2명이 비례대표로 진출하여 2005년 12월 현재 의원 수는 41명이다. 이처럼

럼 17대 국회에서 여성의 국회참여가 크게 증가한 것은 7.1항에서 언급한대로 정당법 개정을 통한 여성후보 추천 의무화 및 권장에 힘입은 바가 크다(〈표 7-1〉 참조).

지방의회 선거에 참여한 여성후보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2년 실시한 제3차 4개 동시지방선거에서 평균 여성후보 비율은 광역의회의 경우 3.1% (48명), 기초의회의 경우 1.9% (140명)였다. 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인 시장·도지사 선거에 여성후보는 한명도 출마하지 않았으며, 자치구·시·군의 기초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여성은 8명이 출마하여 2명이 당선되었다. 선거 결과 당선된 광역 시·도의회 의원 중 여성은 지역구 11명 (1.8%), 비례대표 55명 (75.3%)으로 총 66명 (9.6%)이었으며, 기초 자치구·시·군·구의회 선거에서는 여성당선자 비율이 2.2% (79명)로 매우 낮았다(〈표 7-2〉 참조).

7.3 정부 자문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2004년 말 현재 정부 각 부처의 자문위원회는 총 1,346개이며, 전체 위촉위원 17,470명 (당연직 위원 제외) 중 여성은 32.2%를 점하는 5,617명이다. 이 비율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에서 정한 목표비율 32%를 달성한 수치로 정부 내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정책이 일정부분 가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7-3〉과 〈표 7-4〉 참조).

7.4 정부 고위직 여성임용 확대

현 정부는 출범당시인 2003년 2월 법무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및 여성부, 4개 부처 장관을 여성으로 임용한 바 있으나, 2005년 8월 현재 여성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과 법제처장관, 2명 (11.1%)에 불과하다. 한편, 지난 정부에서는 여성 차관급의 경우 통틀어 1명뿐이었으나, 현 정부는 환경부 차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현재까지 총 5명의 차관급을 배출하였다(〈표 7-5〉 참조).

여성공무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진출은 극히 미약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의 중요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관리직 여성의 비율을 10%까지 확대하는 「여성관리자 임용계획 5개년 계획」이 2002년 수립되어, 기관별로 1인 이상의 여성국장 또는 과장을 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결과 2001년 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4.8%이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이 2004년 말 현재 중앙행정기관 7.4%, 지방자치단체 5.9%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아직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표 7-6〉과 〈표 7-7〉 참조).

7.5 군내 여성간부 확대계획

국방부는 2005년 기준으로 3%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군내 여성간부 비율을 2020년까지 5~7%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국방개혁안을 2005년 9월 발표하였다. 군대내 여군인력 확대 계획안은 2000년 2월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나, 계급별 구조를 고려한 직위확대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2020년까지 간부에 포함되지 않는 병과 군무원, 일반직 공무원 등을 제외한 순수 여성간부 비율을 확대하여, 전체 여성간부 수가 1만 1,4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의무로써 군복무를 수행하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군인을 직업적 접근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국방부는 남성 병역자원 수가 줄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군내 여성간부 비율 확대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제 8 조

8.1 국제회의 정부대표단 구성

국제회의의 정부대표단 구성에 있어서 남녀차별은 없으며,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와 함께 국제회의에서 여성 관련 별도의제가 포함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정부대표단에 포함되는 여성의 수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8.2 국제기구 진출

현재 유엔 사무국 등 국제기구에 진출한 한국인 240여 명 중 1/4이 여성이다.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프로그램은 선발대상의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다. 한편, 여자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1998년부터 시행해 온 여성가족부의 인턴 프로그램은 해마다 15명 내외의 인턴을 선발하여 국제회의 참관 및 국제기구 인턴쉽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8.3 외교부문 여성인력 진입 확대

2004년 12월 기준 외교통상부, 외무공무원 (5급 이상) 전체 1,235명 중 여성은 9%로, 2001년 (5.4%) 대비 3.6%p 증가했다. 이 중 여성 재외공관은 전체 703명 중 여성은 6.7%를 차지하고 있다. 외무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01년 이후 35%을 유지하고 있다(〈표 8-1〉 참조).

제 9 조

제9조는 5차 보고서의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음.

10.1 양성평등교육

대한민국의 양성평등교육은 1997년 제정된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라 발전되어왔다. 이 교육과정은 2000년 초등학교부터 적용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었는데, 국가수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에 따라 관련 교과를 비롯한 범교과와 특별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교육이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의식 내용 강화와 교원의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포함한다. 이를 위해서 교원 연수 실시, 양성평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관련 자료 개발·보급,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학생대상 전국단위 글짓기 대회 및 시범학교 운영 등의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10.1.1 교과서와 교육과정, 교육환경에서의 성 편견 제거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나타난 성 고정 관념과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점검은 제4차부터 현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4번에 걸쳐 주기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는 정책담당자와 교과서 개발진에게 전달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교과서에 대한 최근 분석결과에 의하면 삽화(illustration) 및 예시(example)에 등장하는 남녀 인물의 비율과 같은 양적 측면에서의 성별 불균형은 크게 개선되었다. 성 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한 성인 등장인물의 역할 배분, 역사, 수학, 과학교과서에서의 여성 역할모델 부재, 멀티미디어 자료와 같은 보조적 교수학습자료에서의 성 편견 등이 향후 개선 과제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각 교과별로 성 차별적 교과내용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교과서 보완 지도 자료를 제작하여 초·중등학교에 보급하였으며, 유아를 위한 양성평등교육활동 지도 자료도 개발·보급하였다.

학교 교육환경에서의 관행적인 성 차별을 제거하고 성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이 각급 학교에 권고되었다. 남학생 우선의 출석번호 배정 방식을 폐지하고 여학생에게 바지 착용을 허용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2005년도에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에서의 학습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는 한국적 교육 현실을 고려하여 여학생들의 생리통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키고 생리기간 중 학습권과 건강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정책 연구와 연구시범학교를 통해 모색되고 있다.

10.1.2 교원의 양성평등의식 제고

초·중등교원에 대한 남녀평등의식교육은 학교 양성평등교육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다. 교원연수과정에 “양성평등교육”을 편성·운영하고 각급학교별로 교직원 대상 양성평등의식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양성평등연수과정은 많지 않으나 양성평등교육 과목을 포함하는 연수과정은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양성평등교육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04년에는 교사용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 홈페이지(www.edugender.or.kr)를 개설하여 양성평등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과정에서의 남녀불평등 실태와 해결방안의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1.3 교사와 학부모 대상 양성평등 진로지도 자료 보급

학교교육을 마친 후 직업선택에 있어서 나타나는 남녀 차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양성평등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99년에 여고생 진로지도 CD-ROM을 발간한 데 이어 2003년에 중등학생용 여학생 진로지도 지침서를 개발하여 시범적용 하였으며, 현장적용의 결과를 반영하여 2004년 새로이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중등학교용 양성평등한 진로지도 지침서’는 학교뿐 아니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청소녀를 위해서 전국 600여개 청소년 수련원에도 보급하였다. 아울러 초등학교용 진로지도 프로그램 및 CD를 개발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보급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학부모들이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한 진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학부모용 진로지도 교재인 「아들아, 딸아 더 넓은 미래로 가자」를 개발하였다. 초·중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이 자료의 주요 특징은 주제에 따른 소단원별 편집으로 현장 활용을 높였으며, 학부모의 자습이 가능하도록 자가 점검 항목과 요점정리를 포함하고 풍부한 진로지도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하여 실감나는 교재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10.1.4 생애주기별 양성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성가족부는 생애주기별 올바른 성 정체성 확립을 통한 양성평등사회 건설을 위해 매년 「생애주기별 양성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2004년 ‘유아기 양성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 2005년 ‘아동기 양성평등의식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였다.

2005년 하반기에는 청소년 양성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향후 성년기, 노년기의 성장 단계별로 양성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고, 향후 8차 교육과정 개편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표 10-1〉참조).

10.2 학교 내 성교육과 보건교육

교육인적자원부 내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된 이후 체계적인 학교 성교육 정책이 추진되면서, 2000년 학교급별 성교육 교재 개발, 2001년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 및 CD 보급, 2001년 성교육 담당교사 연수 및 담당 장학사 워크숍, 2002년 학교 성교육 활성화 지침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함께 지속적인 성교육 실태 점검과 효과 분석이 수행되고 있다. 한편, 현재 66.6%에 그치고 있는 초중등학교 보건교사 확보율을 제고함으로써 성교육과 보건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과제를 안고 있다(〈표 10-1〉 참조).

10.3 여학생 이공계 진로 촉진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전공별 여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2004년 사범계(Teaching profession) 61.2%, 인문계열 57.5%, 예체능계열 53.0%로 여성편중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의약계열(51.1%)도 여학생 비중이 과반수를 상회하고 있다. 반면에 사회계열(37.0%)과 자연계(43.2%), 공학계(12.9%)는 전통적으로 여학생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전공분야이다(〈표 10-2〉 참조). 이에 정부는 여학생의 이공계 진로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여성 친화적인 과학교육프로그램 추진의 일환으로 우수 여성과학기술자와 여학생간(초·중·고·대학생 등) 1대1 후견인 연계체제(Mentoring)를 통하여 우수여성 과학기술자의 전문지식, 가치관 등을 여학생들에게 전수하고 과학기술분야로 진출을 유도하는 WISE(Women Into Science & Engineering)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4년에는 1개 거점센터와 8개 지역 센터가 설치되었고 2005년에는 지역 센터를 9개로 확대하고,

1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였다. 이 사업은 ‘여성과학기술자-여대생-중등 여학생’ 상호간의 멘토링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실험실’과 ‘WISE 과학캠프’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WISE 연구캠프’를,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현장 멘토링, 인턴쉽, 초청 강연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여학생들의 이공계열 진학 촉진을 위한 안내서로 2004년에 ‘여성, 과학과 만나다’를 발간하여 중·고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보급하고 교사·학생, 학부모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공계열 학과에 우수한 여성인재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이공계 우수 학생 장학금 지원에 있어 지급 인원의 30% 내에서 여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1인당 5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2004년부터 우수 이공계 여성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사업 WATCH21 (Women’s Academy for Technology Changer in the 21st century)을 시행해 오고 있다. 동 사업의 목표는 ①이공계 재학 중인 여자대학(원)생들의 전공 유지 및 우수 과학기술 인력으로서의 성장 지원, ②여고생들의 이공계로의 진학 동기 유발, ③산업계 근무 여성 공학기술인과의 연계, ④우수 여성공학기술인들 간의 종적이고 횡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여성 공학기술 인적자원의 리더십 함양 ⑤대학교수-산업체 연구원-여자대학(원)생-고교과학교사-여고생을 연결 등을 담고 있다. 사업내용은 여자 대학원생과 여자 대학생, 여고생, 그리고 여자 대학원생의 지도교수와 여고생의 고교교사가 한 팀으로 수행하는 공동연구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여자 대학원생과 여자 대학생에게는 일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사업에 참여한 연구팀 중 우수한 팀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있는데, 2004년에는 40팀 350여명의 팀원들이 5개 분과로 나뉘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05년에는 50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성부(현재 여성가족부)가 2003년부터 전국 5개 대학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도 이공계 여학생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에는 여자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초·중·고 여학생들간 1:1 멘토링 시스템 구축과 공학출신 여성과학자와의 간담회 등이 있다.

10.4 성별 학업성취도 격차

여학생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학교 교육영역은 한국에서 성차별이 두드러지게 개선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2004년 대학 진학률은 여성이 79.7%로 남성(82.8%)보다 아직도 낮은 수준이지만, 여학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9.7%로 남학생(99.7%)과 동일한 수

준을 보이고 있다(〈표 10-2〉 참조).

OECD 30개국을 포함한 40개국을 대상으로 2003년 실시한 남녀 학생의 학업성취도 조사(PISA: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서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상위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학생의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읽기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의 성취도가 여학생보다 높았다. 남학생의 평균 점수(554점)가 여학생(546점)보다 8점 높아, 조사대상국가 중 3번째로 성별 성취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고등교육 과정에서의 남녀 격차가 꾸준히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여학생의 수학, 과학 과목에서의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11.1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수립 (2003 ~ 2007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2차 계획이 진행된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은 2003년부터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으로 이름을 바꾸어 2007년까지 추진 중이다. 이 계획은 남녀차별 시정의 소극적 보호개념에서 한발 나아가 고용평등을 통한 적극적인 여성인력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3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는 ①채용·배치·승진·임금 등에서의 차별 개선을 위한 법 집행력 강화, 민관의 성차별 분쟁예방 및 조정기능 강화, ②모성보호 비용에 대한 사회분담 확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보육지원 강화, 가정친화적인 근무형태 개발 등을 통한 직장가 가정의 양립 지원, ③여성근로자에 대한 취업지원 체제·훈련프로그램의 보강, 고용보험 지원 등을 통한 지속적인 여성의 고용촉진기반 구축, 특히 여성가장·임시일용직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취업지원, 모성보호 강화, ④고용평등교육과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지원 등을 통한 고용평등 의식 확산 등이 있다.

11.2 적극적고용개선조치 (Affirmative Action) 도입

한국의 2005년도 여성권한척도 (GEM)는 59위로 전년도 68위에 비해 9단계 상승했는데, 이는 GEM을 결정하는 요인 중 여성국회위원비율이 2004년 17대 총선을 통해 5.9%에서 13.0%로 7.1%p 상승한 결과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7.1 참조) 그러나 GEM 결정요인 중 여성관리직비율은 2004년 5%에서 2005년 6%로 여전히 낮은 수치이다. 이에 정부는 여성고용확대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여성근로자가 유리천장(glass ceiling)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혀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에서 누락되는 직·간접적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하여, 2005년 4월 30일 『남녀고용평등법』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200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기업 및 500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기업은 매년 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을 정부에 보고하게 되며, 여성 고용률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여성고용목표 및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시행계획(Action Program)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정부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조기정착 및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고용평등평가센터를 2005년 상반기에 설치하여 이를 통해 통계자료 체계화, 고용개선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대상기업 지원 등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에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 일환으로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에서 고용평등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전국의 101개소 공기업은 2004년 7월부터 2007년 12월, 3년 6개월 동안 여성 고용확대, 관리직 여성비율증가, 여성 배치부서 확대 등의 여성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용평등계획서를 2004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하였고 이후 해당 공기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고용개선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고용평등계획의 이행을 점검받게 되었다.

11.3 여성가장실업자훈련 내실화 방안 마련

정부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나 노동시장 진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성가장의 취업능력 제고와 자립기반 조성 필요로 1998년부터 추진된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을 2005년 7월 1일 “여성가장실업자훈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 훈련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에 규정하는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내실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을 경우 장애·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여성가장만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기존의 여성가장 자격요건에 “그 밖에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 여성가장의 훈련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둘째, 여성가장실업자가 더욱 다양한 훈련 및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여성가장실업자훈련’ 외에 다른 훈련 정원의 20% 범위 안에서 추가로 훈련수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훈련 참여 중 경제적 이유로 중도 탈락하는 여성가장을 줄이기 위하여 훈련수당 지급요건을 확대 추진하였다.

11.4 모성보호의 확대

2005년 5월 31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개정으로 산전후휴가급여 지원이 확대되고 유산·사산시 보호휴가 사용이 도입되었다. 90일의 산전후휴가 기간 중 기업이 부담하는 60일의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여 기업의 부담이 없어졌고, 2006년부터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산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2008년까지는 지원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표 11-9〉 참조). 한편, 2006년 1월부터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는 유산·사산휴가와 휴가급여를 받게 된다.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2000년까지 무급이었으나 2001년 11월부터 월 20만원씩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 유급휴가로 바뀌었고, 2003년 30만원, 2004년에는 40만원까지 인상되었다.

『군인사법』(2004년 1월 20일 개정 공포·시행)은 여성군인이 임신·출산하거나 3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다.

국가공무원법(2002년 1월 19일 개정·공포)은 여성 휴직과 관련된 규정으로, 종전 만 1세 미만인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 가능하였으나 이를 3세 미만인 자녀의 양육 또는 여자공무원이 임신·출산에도 휴직이 가능하게 하였고, 휴직기간이 종전 '1년 이내'에서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경력인정이 호봉간의 승급기간에만 휴직기간의 50%를 산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여 호봉승급에 휴직기간의 100%를 반영토록 규정하였다.

11.5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 확대

2004년 기준 전체 보육시설의 보육 아동 930,252명 중에서 직장보육시설에서 보육되는 아동수는 11,787명으로 1.3%에 불과하다. 정부는 여성근로자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6년 1월 30일부터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의 범위를 기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였다(〈표 11-11〉 참조).

11.6 보육정책의 체계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①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②맞벌이 부부 등 취업부모에 적합한 보육 서비스 제공, ③농어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대책 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육발전 종합계획」이 2005년에 마련되어, 매년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보육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 등을 위한 관계부처 의견 조정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관리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4년 10월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업무를 관장하는 보육평가인증사무국을 설치하였다.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는 2005년 시범적용에 이어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2005년부터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되어,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향상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11.7 여성장애인 취업 지원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2004년엔 여성장애인을 포함하여 중증장애인 7,400명에게 보호고용 등을 통한 일거리를 제공하였고 직업평가, 취업알선 및 지원고용,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직업지도 서비스를 107천 건 제공하였다. 또한 비즈공예 등 여성장애인에 대한 적합한 품목에 대한 직업재활 모델화 사업을 지원하였다.

노동부는 기업의 여성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표 11-13〉 참조).

12.1 여성의 건강 현황

12.1.1 유병률

건강수준의 대표적인 지표인 유병률(지난 2주간의 유병률)은 2003년 현재 남성 17.1%, 여성 24.5%로 여성의 건강수준이 남성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10대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여성은 당뇨병, 호흡기 질환, 고혈압성 질환, 자살, 운수사고, 간질환, 폐렴 순이었고, 남성의 경우 간질환, 운수사고, 자살, 호흡기 질환, 당뇨병, 호흡기 결핵, 추락사고 등의 순이었다(〈표 12-1〉 참조).

12.1.2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의료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은 78.8%, 남성은 67.7%로 여성의 이용률이 높았으나, 강도 높은 치료는 남성이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2〉 참조).

12.1.3 HIV/AIDS 현황

HIV/AIDS 여성 감염자 현황을 보면 2002년 35명, 2003년 32명, 2004년 53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에이즈 예방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에이즈 검사를 활성화하며 감염자 재활사업 및 요양쉼터 운영, 보건소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감염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표 12-3〉, 〈표 12-4〉 참조).

12.1.4 생식보건

15세-44세 유배우 부인의 가족계획 실천율(피임률)은 2000년 79.3%에

서 2003년 84.5%로 증가하였다(〈표 12-5〉 참조).

15~44세 유배우 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율을 보면 2000년 39%에서 2003년 40%로 1997년 44%에 비하면 감소하고 있으며, 평균 인공임신 중절 횟수도 2000년 0.7회, 2003년 0.6회로 나타났다. 유배우부인의 1,000명당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2002년)을 보면 20~24세 연령층의 인공임신중절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 연령층의 피임 실천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피임방법도 다소 안정성이 낮은 일시적 피임방법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할 가능성이 높은 데서 나타나는 결과라 볼 수 있다(〈표 12-6〉참조).

12.2 제왕절개분만 억제

한국의 제왕절개분만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왕절개분만 감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제왕절개분만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우선 각종 대중매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병원별 제왕절개분만율을 공개하고, 제왕절개분만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요양기관별로 통보하여 자체적인 감소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표 12-7〉참조).

12.3 모자보건

전국적으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144개 보건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46개 보건소에서 임신부 산전 후 관리 및 건강검진, 여성건강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에게는 산전 산후관리, 영유아에게는 성장단계별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저소득층 임신부 및 영유아에게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고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표 12-8〉 참조).

12.3.1 모성보호 보장성 강화

모성보호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자연분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고, 산전 진찰 중 풍진검사 및 선천성 기형아 검사에 대한 보험 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다.

12.4 저출산 문제 대응

합계출산율은 2001년 1.3명,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 2004년 1.16명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차원에서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안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적정인구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며,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하는 가정과 직장의 조화로운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수단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또한 국회에서도 저출산사회 대책과 관련한 법제화가 시도되어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이 제안되어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마련되어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2005. 5. 18. 공포, 2005. 9. 1. 시행)되었다. 또한 2004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2.5 여학생흡연예방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한국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학생 흡연율의 급격한 증가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소년위원회는 2001년부터 청소년흡연예방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2003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조사결과로도 한국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점차 저연령화 되고 있으며, 특히 여학생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9〉, 〈표 12-10〉 참조).

12.6 중장년기 여성건강 정책

정부는 중장년기 여성건강 증진을 위해 2001년에 개발된 여성 요실금/골다공증 예방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요실금 예방프로그램 사례집 및 교육비디오를 제작하여 보건소에 배포하였다. 또한 여성노인에게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질환의 예방지침서를 발간하여 중장년기 여성들에게 보급, 홍보하였다.

12.7 취약계층 여성의 건강증진

정부는 농어촌 여성노인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정간호 전문 간호사 교육비를 지원하고 방문보건담당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왔는데 매년 검진 대상과 건강진단 항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였다. 2004년 노인건강진단을 받은 노인 35,293명 중 여성노인 25,944명으로 검진율이 73.5%였다(〈표 12-11〉 참조). 또한 노인 안 검진 및 개안 수술비를 지원해서 11,310명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했고 이중 여성노인의 검진율은 67%였다.

지역사회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여성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16개시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등을 지원하는 도우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2.8 여성건강 관련 인프라 구축

여성건강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항목에 여성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항목을 삽입하였다. 또한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를 재분석하여 성별 분리통계를 수록한 여성건강통계집을 생산하였다. 이외에도 임신중절실태조사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암 관련 사업 등 여성특화 질병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하였다.

13.1 국민연금과 여성

2003년 7월부터 1월 이상 근무하는 임신 및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현행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 확대 적용하였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여성고용 비율이 높은 소규모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들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다.

여성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년 증가하여 2004년 현재 5백 9십만 여명이다. 총가입자 중 여성비율도 2002년 32.5%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4년 34.7%에 이른다. 국민연금 수급 현황을 보면, 전체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비율은 약 39% 수준이고 연금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의 경우 2004년 현재 수급자 중 약 30%가 여성인 반면, 유족연금은 2004년 수급자의 90% 이상이 여성이다(〈표 13-1〉, 〈표 13-2〉 참조).

1998년에 이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이 제도화되면서 2004년 기준 분할연금 수급 총 536건 중 여성이 수급한 경우가 468건, 남성이 수급한 경우가 68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확대하기 위해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을 마련하여 2005년 12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13.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일반수급자 중 여성 수급자는 2003년 75만 여명 이었고, 전체 수급자 대비 여성비율은 58.1%이었다(〈표 13-3〉과 〈표 13-4〉 참조). 연령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61세 이상에서 높은 비율을 보

고 있고, 남성은 60세 미만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가구유형별로 구분할 경우 2003년 노인세대가 238,790가구로 전체 717,861세대의 33.3%로 비율이 높는데, 고령일수록 여성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많은 노인여성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모자세대는 2001년 70,152가구, 2002년 65,132가구, 2003년 66,636가구, 2004년 70,591가구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3.3 여성의 탈빈곤을 위한 정책

보건복지부는 빈곤층으로 제도적 보호지대에 있지 못하거나 스스로 자립하기 어려운 여성 가구주를 대상으로 자립과정의 모니터링, 지역자원 연계 등 사례관리 사업 추진을 추진하고 있다. 빈곤여성가구주 사례관리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 개소된 「여성가장희망센터」는 2004년 안산, 천안, 포항 3개소에서 2005년에는 부산, 광양 2개소를 추가하여 5개 지역에 시범운영중에 있다.

13.4 저소득층 여성 창업지원을 위한 융자 및 각종 신용사업

6차 보고서 이행기간 중 신설된 여성창업 지원사업은 여성부의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사업과 여성가장창업자금 지원사업이 있다.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매년 여성발전기금에서 100억원을 조성하여 일정한 기술이나 기능을 익힌 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연 4.5%, 1인당 7천만원까지 5년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2003년에는 295개 업체, 2004년에는 309개 업체에 지원되었다.

여성가장창업자금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매년 여성발전기금에서 30억원을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연 3%, 1인당 5천만원까지 2년간(1회 연장 가능) 창업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이다. 지원대상에는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장애 등으로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여성가장과 미혼 여성으로서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나 미혼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실시 첫 해인 2004년에는 83명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한편, 중소기업청에서 1999년부터 20억원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지원사업은 2005년 12월 현재까지 244명에게 지원되었다.

13.5 모·부자복지법

1973년 제정된 모자복지법은 2002년 12월 18일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모자

복지법에서는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이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를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부에게도 모와 동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13.6 여성 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개정(2004년 1월 1일 시행)으로 여성의 기초생활용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여성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13.7 문화정책의 성주류화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관광부 내의 여성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여성문화 예술단체를 비롯한 NGO, 전문가들과의 연계성 강화, 문화예술 및 관광, 체육 등 문화정책의 각 영역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여성문화TF팀을 구성하였다. 또한 ‘이달의 문화인물’에 여성문화예술가를 발굴·추천하였으며, 문화자원으로서 여성문화의 가치를 발굴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문화 테마관광을 개발하였다.

여성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2004년에 문화기반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의 성별 영향 분석평가를 실시하였고, 여성문화종합실태조사 및 정책연구포럼을 추진하였다. 또한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통한 여성 문화인식 확산을 목표로 여성문화포럼을 개최하였다.

13.7.1 공공문화시설 내 여성편의시설 개선

2003년 예술의 전당 등 문화관광부 산하 7개 문화기관을 중심으로 여성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여성용 화장실을 확충하고 수유시설, 놀이방 등을 설치·확대하는 등 여성편의시설을 개선하였다.

13.7.2 문화활동 참여 현황

문화관광부의 2004년 여성문화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문화예술 활동 및 스포츠 관람 참가율은 여성과 남성 모두 51%로 나타났다. 공연장 이용의 경우 여성 91.5%, 남성 83.2%였고, 전시장 관람에서는 여성 35.3%, 남성 28.6%, 스포츠 관람에서는 여성 10.9%, 남성

28.5%였다. 여가활용방법을 보면 여성의 경우 TV시청 (56.0%), 수면과 휴식 (49.1%), 가사 (48.0%)가 많았고, 남성의 경우도 TV시청 (57.5%), 수면과 휴식 (52.4%)이었으나 가사는 17.1%였다.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관련, 여성은 73.9%, 남성은 71.4%가 불만족스럽다고 했는데, 여성의 불만족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이 53.0%로 가장 컸고, 시간 부족 (23.0%), 건강 및 체력부족 (7.6%) 순이었다. 여성의 독서인구 비율은 62.4%였고 평균독서권수는 12.2권으로 남성 (62.0%, 15.7권) 보다 독서인구 비율은 0.4% 높고, 평균독서권수는 3.4권 적었다.

14.1 『여성농어업인육성법』과 여성의 농업정책 의사결정 과정 참여 증대

2004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취업자는 전체 여성취업자중 9.2%에 해당하는 866천명이고 2003년 923천명에 비해 6.2% 감소하였다. 여성농어업 취업자는 전체 산업 구조 재편으로 2001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여성농어업자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표 11-3>, <표 14-6> 참조).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정(2002년 시행)으로 농업정책의 하위 분야로 간주되었던 여성농업인정책은 독립적인 의제로서의 위치가 굳건해졌으며 정책 방향도 한층 명확히 규정되었다. 또한 법적 토대 위에서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따라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가 구성되고 농업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농림부와 농진청 및 관련 기구의 현재 각종 자문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은 1997년 5.1%였던 것이 2003년 35.9%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4년에는 신설 위원회의 여성위촉 비율이 낮아 전체 위원 중 여성비율이 32.4%로 다소 감소했다. 한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2004년부터 여성농업인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부 관련부처와 여성농업인단체, 전문가가 공히 참여하여 여성농업인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14.2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

『여성농어업인육성법』과 함께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이 여성농업인정책 추진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수립, 추진중이다. 1차 계획은 2001-05

년간 이행되었으며, 2차 계획은 2006년부터 이행된다.

정부는 농업인에 대해 경영개선 자금 및 신규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하는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에서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는 여성 비율을 2004년까지 20%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심사기준 완화,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방안을 마련하였다. 후계농업인 대상자 선정기준 중 영농기반을 보유해야 하는 항목이 있으나, 여성농업인은 부부 공동명의로 영농기반을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100%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1998년 12.9%였던 여성후계자 비율이 2002년에는 20.6%, 2003년에는 25.1%로 증대하였다. 2004년에 후계농업인제도를 창업농지원제도로 개편하면서도 여성 가산점 제도는 유지되었으나, 2004년 선정된 창업농 가운데 여성은 13.1%에 불과하였다.

기존의 여성후계농업인제도 또는 창업농 제도는 일부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보기는 했지만, 그 효과가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농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족농 구조에서 여성의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이 농경지 및 가축 등의 영농기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대안과 농업계 학력 중심으로 되어있는 영농경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4.3 여성농업인정책 관련 예산

여성농업인정책 관련 예산은 2001년 총 167억원에서 2002년에는 149억으로 감소했다가 2003년에는 201억, 2004년에는 548억으로 증가한 듯이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는 주로 자녀 학자금 지원과 양육비 지원 등 농가 직접 보조 형태의 지원금이 증가한 것이며 순수한 여성농업인정책예산의 증가폭은 전체 예산액 증가율만큼 현저하지 않았다. 특히,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예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의 양적 증가가 여성농업인정책의 질적 확충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표 14-1〉 참조).

14.4 여성 농림어업인의 보건복지 증진 및 모성보호

정부에서는 농촌 모자가정의 빈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모자가족을 중심으로 한 한부모 농업인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에는 편모자녀 뿐 아니라 편부자녀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2004년에는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농지소유기준을 조정하여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농사일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도우미가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농가도우미제도를 2000년부터 도입하여 2003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2004년에는 지원 단가를 상향조정하고 이용절차를 간소화였다. 농가도우미 이용자는 2001년 1,692명에서 2004년 3,370명으로 시행 3년간 이용자가 2배정도 증가하였다.

2004년 3월 제정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산촌, 어촌 여성의 모성보호 및 지위향상, 복지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동 법을 근거로 마련된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기본계획(2005~2009)에서는 여성복지 강화를 주요한 정책과제로 다루고 있다.

14.5 여성농업인센터의 확대 설치

지역적, 성적 소외로 인해 여성농업인들은 교육기회와 사회적 교류, 문화향수, 고충상담, 보육지원 등의 측면에서 수혜를 받기 어려운 경향이 높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접근이 용이한 복합 서비스 공간으로서 여성농업인센터를 설치하여 여성농업인에 특화된 종합 복지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2001년 처음으로 4개의 여성농업인센터를 시범운영한 이후, 2002~2003에는 각 도별로 2개소씩 총 18개소의 센터를 운영하였고 2004년에는 총 27개소로 확대하였다.

14.6 여성농업인의 교육기회 확대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농업생산-유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보화교육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이 크게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영농기술교육과정 여성 참여자도 현저히 증가하여 새로운 농업환경에 대한 여성의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여성농업인 스스로 전문지식과 실천력을 갖추고 자발적 교육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부 소속 농업연수원에 여성농업인 교관반을 설치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다(〈표 14-2〉 참조).

14.7 협동조합 및 자조집단의 결성·참여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에서는 2005년까지 전체 농협조합원 중 여성 50%, 여성대의원 6,000명, 여성임원 600명이 되도록 목표치를 설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여성조합원 참여확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업적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결

과, 차츰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현재 여성조합원은 23.6%에 불과하고 여성대의원은 4,886명, 여성임원은 237명 수준으로 목표치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표 14-3〉 참조).

14.8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 경감을 위한 각종 보조기구 개발과 시범 사업

농업생산에서 여성노동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과 건강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각종 보조기구 개발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작업 보조기구 개발·보급사업은 2004년부터 시범사업 대상 농가를 크게 확대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요 작물의 재배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이 주로 담당하는 작업의 능률을 높이고 작업자세를 개선하여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도구를 개발, 보급하고 있는데, 2002년에는 농산물 선별 작업장 개선시스템을, 2003년에는 딸기 작업개선 보조기구를 개발하여 보급하기 시작해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외에 농작업 피복장비 등도 꾸준히 개발, 보급하고 있다(〈표 14-4〉 참조).

15.1 모의 친생부인의 소 인정

2005년 민법개정으로 부에게만 인정하였던 친생부인의 소를 모에게도 인정하였다. 모자관계는 분만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추정되나, 유아(棄兒)로 인해 모자관계의 추정이 어려울 경우도 있으므로 모에게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6.1 호주제도의 폐지

그동안 대표적인 남녀차별로 남아 있던 호주제(5차 보고서 249-254)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및 민법개정을 통해 폐지되었으며, 개정된 민법은 2008. 1. 1.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6.2 자의 성 결정

구민법에서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의 가에 입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2005년 개정된 민법(2008. 1. 1. 부터 시행)에서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의 성 결정에 있어서 ‘부성승계의 원칙’, ‘혈통주의에 의한 성 결정’을 유지하면서 모의 성 승계가능성을 부여한 것이다. 부가 외국인인 경우, 부의 외국성이든 모의 한국성이든 자의 이름을 정할 수 있다.

16.3 재혼 금지기간 삭제

구민법은 “여자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지 않으면 재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여성의 전후 혼인이 겹쳐지는 경우 그로부터 출생되는 자녀의 부성(父性)결정의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유전자 감식 등, 친자관계 감정기법의 발달로 계속 존치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폐지론이 유력하였다. 민법의 일부 개정으로 2005년 3월 31일 재혼금지기간 조항은 삭제되었다.

16.4 부의 인지

구민법에서 부친을 알 수 없는 자녀는 모친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친의 가에 입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부친이 혼외출생자녀를 인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모친의 호적에 입적되고, 부친이 자녀를 인지하면 모친의 의사에 상관없이 부친의 호적에 입적되었다. 개정된 민법은 부친을 알 수 없는 자녀는 모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후일 혼외출생자녀가 인지된 경우 무조건 부친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협의에 따라 자녀가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6.5 이혼가정의 양육비 지급이행 확보방안

이혼가정의 경우 부모의 동등한 책임부담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 확보 문제가 중요하다. 이에 2005년 양육비 이행 확보방안을 위한 가사소송법 개정안과 민사집행법 개정안 그리고 양육비 이행 확보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2005년 12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또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였으나 그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현금공탁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정기금 지급을 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였으나 그 불이행이 있는 경우, 현행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불이행한 양육비 부분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으나, 장래에 받게 될 양육비를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임금채권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을 미리 압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셋째,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혼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대지급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16.6 부부재산제

부부재산제와 관련된 현행법은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고려하여 부부재산제도로써 별산제를 채택하여 부부 일방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이혼의 경우에만 재산분할을 인정함으로써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를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 잠재적 지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등 매우 불리하게 운용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혼인생활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는 주거지에 관련된 재산의 경우에는 부부 일방의 임의처분을 제한하고,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도 부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상속·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제외)에 대하여는 균등하게 분할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부부재산과 관련하여 부부사이의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안이 민법 개정안이 2005년 12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표 4-1〉 대학의 여교수 비율

(단위: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전 체	여교수	14.1	14.6	14.9	15.4	16.2
국·공립대학	여교수	8.8	9.1	9.2	9.97	10.7
사립대학	여교수	16.1	16.5	16.9	17.4	18.2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표 4-2〉 여성 교장·교감 현황

(단위: 명, %)

연도	교장			교감			계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2001. 4	8,105	595	7.3	8,484	802	9.5	16,589	1,397	8.4
2002. 4	8,250	616	7.5	8,741	907	10.4	16,991	1,523	9.0
2003. 4	8,414	623	7.4	9,032	1,068	11.8	17,446	1,691	9.7
2004. 4	8,583	670	7.8	9,162	1,206	13.2	17,745	1,876	10.6

자료: 여성가족부(2005),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2004년도 시행실적 및 2005년도 시행계획』

〈표 5-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육시행 성과

	2003년	2004년
수강자 (명)	22,471	40,660

자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각 년도.

주: 2003년 교육과정: 성 인지정책분석, 성 인지력향상, 여성리더쉽향상, 전문인력양성

2004년 교육과정: 양성평등정책분석, 여성리더쉽향상, 전문인력양성

〈표 5-2〉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실태 점검결과

(단위: %)

	2001	2002	2003	2004
성희롱예방교육실시율	97.3	98.6	96.1	99.4
성희롱고충전담창구설치율	34.2	34.4	87.4	93.1
성희롱고충상담원지정율	-	30.0	86.7	87.6
자체성희롱예방실시지침제정율	43.0	16.1	72.2	85.9
대상기관 (개소)	4,663	4,411	309	11,415

자료: 여성부(여성가족부), 『여성백서』, 각년도.

〈표 5-3〉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발간 성과

200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책자) - 남과 여, 공존을 배우는 교실(영상자료)
20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 개정, 재발간(책자) - 성희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영상자료)
20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당한 도전, 아름다운 그녀(영상자료) - 함께 하는 대학, 행복한 시작(영상자료)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없는 일터 다함께 Go! Go! (영상자료)

자료: 여성부(여성가족부), 『여성백서』, 각년도.

〈표 5-4〉 성인의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시간(요일평균)

(단위: %, 시간: 분)

	행위자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2004		1999		2004		1999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가사노동	49.0	91.9	46.0	92.6	1:11	3:58	1:11	4:17
음식 준비	16.6	84.4	12.7	85.2	0:39	1:48	0:41	1:58
의류관리	4.5	51.6	3.7	54.6	0:28	0:46	0:31	0:52
청소 및 정리	20.8	70.9	21.3	73.4	0:33	0:48	0:34	0:50
집 관리	10.1	13.0	10.2	11.8	0:44	0:29	0:53	0:32
장보기, 쇼핑	10.1	36.4	7.7	37.2	0:37	0:40	0:38	0:41
가족보살피기	16.2	43.0	13.6	44.4	1:06	1:52	1:08	1:51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년도.

〈표 6-1〉 성매매 피해 및 탈성매매 여성 지원시설 현황

(단위: 개)

	2002	2003	2004	2005
성매매피해상담소*	-	7	17	29
성매매피해자 일반·청소년 지원시설*	25	26	38	35
탈성매매여성 위한 자활지원 시범사업**	2	2	2	2
외국인성매매여성 쉼터 시범사업**	2	2	2	2

〈표 6-2〉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강 간	6,750	6,116	6,519	6,959
성 폭력처벌법위반	3,893	3,334	3,913	4,264
계	10,643	9,450	10,432	11,223

자료: 경찰청 (2005), 「경찰백서」.

〈표 6-3〉 가정폭력범죄 검거·조치 현황

구 분	검거 건수	검거 인원	조 치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	
			구속	불구속	기타(계도)	건수	인원
'01	14,585	15,557	691	14,760	106	4,559	4,813
'02	15,151	16,324	586	15,127	611	3,702	4,083
'03	16,408	17,770	496	16,787	487	4,186	4,459
'04	13,770	15,208	329	13,969	910	2,587	2,616

자료: 경찰청 (2005), 「경찰백서」.

〈표 7-1〉 국회의원 수

(단위: 명, %)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수	여성의원		지역구 당선자		비례대표 당선자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제 15대(1996-2000)	299	9	3.0	2	0.8	7	15.2
제 16대(2000-2004)	273	16	5.9	5	2.2	11	23.9
제 17대(2004-2008)	299	41	13.7	10	4.1	31	55.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2~15대 국회의원 선거총람』

〈표 7-2〉 제2,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당선자 수

(단위: 명, %)

여성당선자 각급선거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98)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2)		
		계	여성	전체(비율)	계	여성	전체(비율)
계		4,427	97	2.2	5,097	205	4.0
시·도지사선거		16	0	0.0	16	0	0.0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232	0	0.0	232	2	0.9
시·도 의회의원 선거	소계	690	41	5.9	682	66	9.6
	지역구	616	14	2.3	609	11	1.8
	비례대표	74	27	36.5	73	55	75.3
기초자치구·시·군 의회의원선거		3,489	56	1.6	3,485	79	2.2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8, 2002), 『제2차 및 제3차 동시지방선거총람』.

〈표 7-3〉 정부내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목표율 (2003~2007)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목표율(%)	32	34	36	38	40

자료: 여성부(여성가족부), 『여성백서』, 각 년도.

〈표 7-4〉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 (2004. 12. 31 현재)

(단위: 개, %)

구 분	위원회수	여성참여 위원수	비 율	위촉직 위원수	위촉직 여성 위원수	여 성 참여율
전 체	1,346	1,291	95.9	17,470	5,617	32.2
중 앙	343	313	91.3	5,966	1,619	27.1
지 방	1,003	978	97.5	11,504	3,998	34.8

자료: 여성부(여성가족부), 『여성백서』, 각년도.

〈표 7-5〉 여성장관 현황

	장관급행정부처	여성 장관수	비율(%)
2001	18부 4처	2명(환경부, 여성부)	11.1
2003		4명(법무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22.2
2005		2명(여성가족부, 법제처)	11.1

자료: 행정자치부 (2005).

〈표 7-6〉 여성관리직 (5급 이상) 임용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명,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합계	1,605	5.1	1,749	5.4	1,975	5.9	2,222	6.7
중앙	741	4.8	872	5.5	1,046	6.1	1,203	7.4
지방	864	5.3	877	5.3	929	5.4	1,019	5.9

자료: 행정자치부·중앙인사위원회자료 (2004).

〈표 7-7〉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2003. 12. 31 현재)

(단위: 명, %)

구분	계	1급(상당)~5급(상당)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계	전체(A)	33,496	279	583	1,389	7,129	24,116
	여성(B)	1,975	5	10	47	290	1,623
	B/A	5.9	1.8	1.7	3.4	4.0	6.7
중앙	전체(A)	16,440	242	509	1,056	4,657	9,976
	여성(B)	1,046	4	10	29	198	805
	B/A	6.4	1.7	2.0	2.7	4.3	8.1
지방	전체(A)	17,056	37	74	333	2,472	14,140
	여성(B)	929	1	0	18	92	818
	B/A	5.4	2.7	0.0	5.4	3.7	5.8

자료: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2004).

〈표 7-8〉 연도별 여성공무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체 인원	903,823	913,104	923,714	888,217	865,650	849,152	859,329	869,030	891,949	915,473
여성	246,468	253,917	263,853	263,853	258,347	267,647	282,028	286,074	302,830	324,576
여성 비율	27.3	27.8	29.7	29.7	31.5	31.5	32.8	32.9	34.0	35.5

자료: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각 년도.

〈표 8-1〉 외무고시 여성 합격자 현황

(단위: 명, %)

	전체 합격자 수	여성 합격자 수	여성 비율
2002년	35	16	45.7
2003년	28	10	35.7
2004년	20	7	35.0
2005년	19	10	52.6

자료: 외교통상부.

〈표 10-1〉 성교육 연간계획 수립 현황 (2004년)

(단위: 건, %)

구 분	수립	미수립	교육계획서 포함	계
초	5,553 (99.9)	8 (0.1)	3,465 (62.3)	5,561
중	2,918 (99.9)	4 (0.1)	1,987 (68.0)	2,922
고	2,086 (99.4)	12 (0.6)	1,283 (61.2)	2,098
계	10,557 (99.8)	24 (0.2)	6,735 (63.7)	10,581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표 10-2〉 전공분야별 여학생 비율 (2002~2004)

Female Students by Major Field of Study

(단위: %)

구 분		계 Total	인문계 Huma- nities	사회계 Social Science	자연계 Natural Science	의약계 Medicine & Pharmaco- logy	예체계 Arts & Physical Ed.	사범계 Teaching Profession	교육대학 Junior Teachers' college
전문대학 Junior College	2002	36.7	61.7	47.6	21.3	70.1	44.1	97.4	N.A
	2003	36.2	61.4	46.6	20.4	70.9	42.7	97.2	
	2004	36.7	62.6	45.4	37.6	66.5	46.2	96.0	
대학 Under- graduates	2002	36.6	57.3	37.2	22.4	49.6	54.5	61.9	73.2
	2003	36.8	57.5	37.7	22.4	50.8	53.9	61.5	73.6
	2004	36.8	57.5	37.0	43.2	51.1	53.0	61.2	71.8
대학원 Graduates	2002	39.7	38.6	33.2	21.4	39.5	61.0	63.2	N.A
	2003	41.4	40.1	34.5	22.2	40.9	61.8	65.9	
	2004	43.0	44.5	33.2	42.4	44.5	61.8	68.8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2~2004).

Source: Ministry of Education,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1990~2003).

〈표 10-3〉 각급학교 성별 진학률

(단위: %)

연도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고등학교→대학교		대학교→대학원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01	100.0	99.9	99.6	99.5	67.6	73.1	7.5	10.8
2002	100.0	100.0	99.5	99.6	72.4	75.8	8.0	10.7
2003	100.0	100.0	99.7	99.7	77.8	81.5	9.2	10.7
2004	100.0	100.0	99.7	99.7	79.7	82.8	8.4	9.9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주: 대학교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4년제 일반대학교 포함.

진학률= (각급학교 당해연도 졸업자 중 진학자/각급학교 당해연도 졸업자)×100

〈표 10-4〉 성별, 계열별 고등학생 분포 및 여학생비율

(단위: %, 명)

분 포		전 체	일 반 계	실업계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양	종합	실업
2001	여성	100.0(914,906)	65.3	0.7	3.2	19.5	0.1	8.2	3.0
	남성	100.0(996,267)	66.5	1.1	20.3	4.9	0.4	4.5	2.2
2002	여성	100.0(856,044)	67.7	0.7	3.2	18.1	0.1	7.5	2.8
	남성	100.0(939,465)	68.2	1.1	19.1	5.0	0.4	4.3	1.9
2003	여성	100.0(840,698)	69.4	0.7	3.1	16.7	0.1	7.0	3.0
	남성	100.0(925,831)	69.2	1.1	18.4	5.0	0.4	4.0	1.9
2004	여성	100.0(827,982)	70.9	0.8	3.1	16.0	0.0	6.8	2.4
	남성	100.0(918,578)	70.2	1.1	17.7	4.9	0.5	3.9	1.7
여학생비율		전 체	일 반 계	실업계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양	종합	실업
2001		47.9	47.4	36.0	12.8	78.4	12.1	62.5	56.2
2002		47.7	47.5	37.1	13.2	76.7	10.7	61.3	57.3
2003		47.6	47.6	37.0	13.5	75.3	9.9	61.7	58.4
2004		47.4	47.7	38.2	13.4	74.5	8.4	61.4	55.9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주: 일반계에 예술고, 체육고, 외국어고, 과학고 포함.

〈표 10-5〉 성별 학위 취득자수 및 인구 만 명당 학위 취득자

(단위: 명, %)

연도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학위취득자수		인구만명당 학위취득자		학위취득자수		인구만명당 학위취득자		학위취득자수		인구만명당 학위취득자	
	계	여성 비율	남성	여성	계	여성 비율	남성	여성	계	여성 비율	남성	여성
2001	290,798	47.7	63.30	58.65	53,109	34.0	14.59	7.63	6,221	23.8	1.97	0.63
2002	299,636	49.0	63.73	62.05	56,991	36.9	14.99	8.89	6,758	23.2	2.16	0.66
2003	314,890	48.8	66.82	64.58	64,259	39.8	16.03	10.75	7,240	23.7	2.29	0.72
2004	324,207	50.4	66.26	68.28	66,720	41.4	16.13	11.53	8,008	24.4	2.50	0.82

자료: 통계청, <http://kosis.nso.go.kr> 장래인구추계.

교육인적자원부(2004), 『교육통계연보』.

주: 학사학위 취득자수는 교육대학, 4년제 일반대학교,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졸업생수임.

〈표 10-6〉 각급학교 성별 학교유형

(단위: 개교, %)

연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학	별학		공학	별학		공학	별학	
		남	여		남	여		남	여
2001	1,786 (64.5)	518 (18.7)	466 (16.8)	1,055 (53.6)	428 (21.7)	486 (24.7)	357 (95.5)	1 (0.3)	16 (4.6)
2002	1,880 (66.9)	485 (17.3)	444 (15.8)	1,101 (55.2)	415 (20.8)	479 (24.0)	359 (95.5)	1 (0.3)	16 (4.3)
2003	1,967 (69.0)	462 (16.2)	421 (14.8)	1,148 (56.5)	412 (20.3)	471 (23.2)	388 (95.8)	1 (0.2)	16 (4.0)
2004	2,032 (70.4)	449 (15.5)	407 (14.1)	1,200 (57.7)	413 (19.9)	467 (22.5)	394 (95.9)	1 (0.2)	16 (3.9)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주: 대학교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4년제 대학교, 산업대학 포함.

〈표 10-7〉 장학금 급여율과 학비 감면율

(단위: 명, %)

연도	학비지원 종류	대학교			대학원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2001	장학금급여상황	130,413 (100.0)	59,878 (45.9)	70,535 (54.1)	16,403 (100.0)	4,378 (26.7)	12,025 (73.3)
	학비 감면자	876,801 (100.0)	450,169 (51.3)	426,632 (48.7)	205,239 (100.0)	84,818 (41.3)	120,421 (58.7)
2002	장학금급여상황	128,287 (100.0)	56,685 (44.2)	71,602 (55.8)	19,494 (100.0)	5,212 (26.7)	14,282 (73.3)
	학비 감면자	921,971 (100.0)	470,162 (51.0)	451,809 (49.0)	164,676 (100.0)	63,107 (38.3)	101,569 (61.7)
2003	장학금급여상황	121,413 (100.0)	53,978 (44.5)	67,435 (55.5)	18,383 (100.0)	5,331 (29.0)	13,052 (71.0)
	학비 감면자	987,432 (100.0)	523,958 (53.1)	463,474 (46.9)	598,074 (100.0)	303,994 (50.8)	294,080 (49.2)
2004	장학금급여상황	146,950 (100.0)	67,435 (45.9)	79,515 (54.1)	21,060 (100.0)	6,909 (32.8)	14,151 (67.2)
	학비 감면자	1,054,931 (100.0)	546,905 (51.8)	508,026 (48.2)	564,797 (100.0)	154,583 (27.4)	410,214 (72.6)

자료: 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10-8〉 준학교의 여성 비율

(단위: %)

준학교 유형		2001	2002	2003	2004
국민학교		100.0	100.0	100.0	100.0
고등국민학교		79.5	66.7	45.3	61.2
고등기술학교		57.6	65.5	66.2	63.5
각종학교	중학과정	73.6	73.8	74.7	72.8
	고교과정	35.3	36.5	37.1	28.7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81.8	-	-	-
방송통신고등학교		49.1	55.5	52.6	57.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주: 방송통신고등학교도 준학교에 포함시켰음.

여성비율=(여학생수/전체학생수)×100

〈표 10-9〉 방송통신대학과 산업대학(개방대학)의 여학생 비율

(단위: 명, %)

연 도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개방대학)	
	계	여성비율	계	여성비율
2001	370,661	60.2(222,982)	180,068	23.3(41,902)
2002	367,305	60.8(223,398)	187,040	24.4(45,545)
2003	308,290	63.0(194,143)	191,455	24.8(47,439)
2004	290,728	64.3(186,876)	189,035	24.8(46,871)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10-10〉 독학학위 취득시험 여성 현황

(단위: 명, %)

연 도	지원자수	응시자수	합격자수	합격률	
				여성	남성
2001	1,134(57.7)	932(57.6)	318(62.6)	34.1	27.7
2002	1,336(59.6)	1,124(60.4)	453(60.0)	40.3	41.0
2003	1,358(59.5)	1,133(60.8)	560(61.9)	49.4	47.1
2004	1,270(62.2)	1,062(64.0)	633(67.1)	59.6	52.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10-11〉 체육교육에서 여학생 비율

(단위: %, 명)

연 도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	4년제 대학 체육학 관련 전공자
2001	33.0(161)	29.4(921)	27.8(10,718)
2002	34.4(185)	30.0(939)	26.3(11,278)
2003	34.9(197)	30.6(1,019)	16.6(6,776)
2004	33.8(194)	30.5(1,065)	15.7(6,955)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11-1〉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단위: 천명, %)

연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남	여	남	여
2001	13,172	9,299	74.3	49.3
2002	13,435	9,486	75.0	49.8
2003	13,539	9,418	74.7	49.0
2004	13,727	9,690	75.0	49.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연보』, <http://kosis.nso.go.kr/>

〈표 11-2〉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단위: 천명,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총 수	9,299	49.3	9,486	49.8	9,418	49.0	9,690	49.9
15-19세	221	12.7	193	11.9	176	11.4	165	11.1
20-24세	1,180	62.0	1,214	62.6	1,202	61.8	1,195	62.8
25-29세	1,176	57.6	1,165	59.5	1,148	60.7	1,192	63.9
30-34세	1,036	49.1	1,074	49.9	1,081	49.9	1,083	50.4
35-39세	1,233	59.8	1,208	59.4	1,172	58.3	1,196	58.9
40-44세	1,296	63.6	1,339	63.9	1,363	64.1	1,381	65.5
45-49세	1,004	64.4	1,060	64.1	1,085	61.6	1,174	62.7
50-54세	681	56.6	723	58.1	712	55.6	756	56.2
55-59세	517	50.7	511	49.6	522	49.1	549	49.5
60세이상	954	30.0	999	30.1	955	27.8	1,000	28.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연보』, <http://kosis.nso.go.kr/>

〈표 11-3〉 산업별 여성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

산 업		2001	2002	2003	2004
농어업	소계	2,148(10.0)	2,069(9.3)	1,949(8.8)	1,825(8.1)
	남성	1,132(9.0)	1,085(8.4)	1,026(7.9)	959(7.3)
	여성	1,016(11.3)	984(10.7)	923(10.1)	866(9.2)
광공업	소계	4,285(19.9)	4,258(19.2)	4,222(19.1)	4,306(19.1)
	남성	2,765(22.0)	2,739(22.0)	2,746(21.1)	2,812(21.3)
	여성	1,520(16.9)	1,519(16.9)	1,476(16.2)	1,494(16.0)
서비스업	소계	15,139(70.2)	15,841(71.5)	15,968(72.1)	16,427(72.8)
	남성	8,684(69.0)	9,119(69.0)	9,259(71.1)	9,423(71.4)
	여성	6,455(71.8)	6,722(71.8)	6,709(73.7)	7,004(74.8)
총 계	소계	21,572(100.0)	22,169(100.0)	22,139(100.0)	22,557(100.0)
	남성	12,581(100.0)	12,944(100.0)	13,031(100.0)	13,193(100.0)
	여성	8,991(100.0)	9,225(100.0)	9,108(100.0)	9,364(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http://kosis.nso.go.kr/>

주: () 안은 취업자 구성비.

〈표 11-4〉 직종별 여성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

직 종	2001	2002	2003	2004
입법자, 관리자	31(0.3)	32(0.3)	35(0.4)	40(0.4)
전문가, 기술자	1,259(14.0)	1,339(14.5)	1,506(16.5)	1,542(16.5)
사무직	1,382(15.4)	1,476(16.0)	1,496(16.4)	1,582(16.9)
서비스	3,491(38.8)	3,578(38.8)	3,387(37.2)	3,499(37.4)
농림, 어업	935(10.4)	907(9.8)	829(9.1)	764(8.2)
기능공 및 조립공	898(10.0)	842(9.1)	741(8.1)	769(8.2)
단순노무자	994(11.1)	1,051(11.4)	1,116(12.3)	1,168(12.5)
전 체	8,990(100.0)	9,225(100.0)	9,110(100.0)	9,364(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http://kosis.nso.go.kr/>

〈표 11-5〉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2004년)

(단위: 천명, %)

구 분	근로자수		구성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임금근로자	8,488	6,096	100.0	100.0
정규직	5,756	3,434	68.7	56.3
비정규직(순계)	2,732	2,662	32.2	43.7

자료: 노동부.

〈표 11-6〉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 실적

(단위: 백만원, 명, %)

구 분	지원액	훈련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2001	4,901	3,893	3,048	868	28.5
2002	3,050	2,445	1,503	442	29.4
2003	3,277	2,823	1,729	568	32.9

자료: 노동부, 『2004 여성과 취업』.

〈표 11-7〉 연간 평생학습참여율 및 교육이수 일수 (2004년)

(단위: %, 일)

	평생 학습 참여자 비율	직장연수		학원수강		교양강좌		직업훈련		TV, 라디오 강좌 청취		기타	
		참여자 비율	교육 이수일	참여자 비율	교육 이수일	참여자 비율	교육 이수일	참여자 비율	교육 이수일	참여자 비율	교육 이수일	참여자 비율	교육 이수일
전체	21.6	10.8	9.9	4.1	73.5	4.6	27.9	2.1	19.5	4.6	37.7	0.3	16.6
남성	23.8	14.8	9.9	3.4	69.3	2.6	19.4	3.2	15.9	4.9	39.5	0.2	15.3
여성	19.5	7.1	10.1	4.8	76.3	6.4	31.1	1.2	28.5	4.3	35.8	0.3	17.4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http://kosis.nso.go.kr/>

〈표 11-8〉 연도별 남녀 평균 임금수준 및 임금격차

(단위: 천원, %)

구 분	2001	2002	2003
남성임금(천원)	1,969	2,120	2,303
여성임금(천원)	1,245	1,331	1,446
임금격차(%)	63.2	62.8	62.8

자료: 노동통계, <http://laborstat.molab.go.kr/>

〈표 11-9〉 모성보호급여 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1	2	3	4	5	6	
산전후 휴가 급여	인원	22,711	32,133	38,541	3,274	2,842	3,744	3,189	3,751	3,814	
		22,601	33,522	41,610	3,572	3,152	4,097	3,514	4,143	4,205	
육아 휴직 급여	총계	신규 수급	3,763	6,816	9,303	800	706	946	836	1,013	917
		인원	-	-	-	2,948	2,698	3,224	2,907	3,269	3,299
		금액	3,087	10,576	20,803	2,189	1,960	2,573	2,185	2,452	2,330
	남	신규 수급	78	104	181	25	19	12	17	26	10
		인원	-	-	-	62	62	66	67	69	59
		금액	54	133	326	45	36	43	42	46	38
	여	신규 수급	3,685	6,712	9,122	775	687	934	819	987	907
		인원	-	-	-	2,886	2,636	3,158	2,840	3,200	3,240
		금액	3,033	10,443	20,478	2,144	1,924	2,530	2,143	2,406	2,292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2004 고용보험통계연보』.

주: * 금액은 신규수급인원을 포함한 해당기간의 총 수급인원에 대한 지급금액임.

〈표 11-10〉 연령별 보육 아동수 및 대기아동수* (2004년)

연령		아동수 ¹⁾	보육아동수 ²⁾	대기아동수 ²⁾	대기아동비율 ²⁾
계		3,308,130	556,597	81,291	14.6
영아	소계	961,405	63,153	19,429	30.8
	0세	481,264	17,760	3,510	19.8
	1세	480,141	45,393	15,919	35.1
2세		514,835	107,249	21,006	19.6
3~5세		1,831,890	386,195	40,856	10.6

자료: 1)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http://kosis.nso.go.kr/>.

2) 여성가족부, 『2004년 보육교육실태조사』.

주: * 대기아동수: 보육시설에 입실을 신청하고 입실 허가를 기다리는 아동의 수.

〈표 11-11〉 연도별 직장보육시설 현황

(단위: 개소)

연도	설치된 시설수 (보육수당지급 사업장 포함)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미만			
		계	시설 설치		보육수 당지급	계	시설 설치		보육수 당지급
			단독	공동			단독	공동	
2001	213	85	64	5	16	128	112	15	1
2002	210	89	74	5	10	121	103	13	5
2003	236	105	89	9	7	131	109	16	6
2004	301	132	91	9	32	169	124	19	26

자료: 여성부(여성가족부), 『여성백서』, 각 연도.

〈표 11-12〉 가구주 현황

(단위: 1,000가구, %)

연 도	총가구수	여성가구주 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구성비율
2001	14,834	2775	12,058	18.7
2002	15,064	2845	12,218	18.9
2003	15,298	2918	12,379	19.1
2004	15,539	2995	12,544	19.3
2005	15,789	3076	12,713	19.5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00-2020』(2002).

〈표 11-13〉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 장려금 차등 지원*

2005. 12 현재

구 분	매월 장려금 지급대상인원이 매월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30 이하인 인원	매월 장려금 지급대상인원이 매월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한 인원
경증남성	월30만원	40만원
경증여성	월37만5천 원	50만원
중증남성	월37만5천 원	50만원
중증여성	월45만원	60만원

* 주 : 정부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게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라 장애인 1인당 고용장려금을 차등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함.

자료 : 노동부, 장애인고용팀

〈표 12-1〉 성별 10대 사망원인 (2002)

순위	남 성		여 성	
	사인	사망률/(10만명)	사인	사망률/(10만명)
1	암	166.4	암	94.7
2	뇌혈관질환	72.7	뇌혈관질환	81.7
3	심장질환	38.5	심장질환	35.8
4	간질환	35.2	당뇨병	26.0
5	운수사고	27.4	호흡기 질환	19.9
6	자살	26.4	고혈압성 질환	14.3
7	호흡기 질환	25.3	자살	11.9
8	당뇨병	24.3	운수사고	10.8
9	호흡기결핵	9.6	간질환	8.6
10	추락사고	7.9	폐렴	5.4

자료 : 통계청 (2003), 『사망원인통계연보』.

〈표 12-2〉 의료서비스 이용률 (2003)

(단위: %)

	이용률	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종합병원	병의원	한의원	보건소	약국	기타
여성	78.8	7.6	36.3	3.3	1.7	6.3	0.0
남성	67.7	7.0	27.7	2.4	1.2	6.6	0.1

자료: 통계청 (2005), 『200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표 12-3〉 HIV/AIDS 감염자 현황

(단위: 명, %)

	2002	2003	2004
전체 감염자	398	534	612
여성 감염자	35	32	53
여성 감염자 비율	8.8	6.0	8.7

자료: 보건복지부.

〈표 12-4〉 HIV/AIDS 여성 감염자 연령별 현황 (2004년)

(단위: 명)

연령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감염자 수	0	4	14	12	9	8	6

자료: 보건복지부.

〈표 12-5〉 유배우 부인의 연령별 피임률 (2003년)

(단위: %)

연령	15-24	25-29	30-34	35-39	40-44
피임률	56.8	64.8	80.8	90.8	91.5

자료: 보건복지부.

〈표 12-6〉 유배우 부인의 1000명당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2002년)

(단위: 회)

연령	20-24	25-29	30-34	35-39	40-44
인공임신 중절률	74	38	30	21	6

자료: 보건복지부

〈표 12-7〉 연도별 제왕절개분만율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제왕절개분만율	41.5	38.6	40.5	39.3	38.6	38.1

자료: 보건복지부.

〈표 12-8〉 임신부 영유아 등록관리 및 건강진단

(단위: 건, 명)

	2002	2003	2004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관리	300,494	358,675	481,500
영유아에 대한 성장단계별 보건관리	2,094,125	2,419,041	2,952,995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33,875	35,901	59,599

자료: 보건복지부.

〈표 12-9〉 성별 연령별 흡연율(2004년)

구 분	남성 (%)	여성 (%)
20-29세	66.2	6.1
30-39세	61.1	2.1
40-49세	58.3	2.5
50-59세	50.4	3.6
60세 이상	45.3	7.6
20세 이상 전체	57.8	4.0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

〈표 12-10〉 흡연시작 연령 (2004년)

(단위: %)

구분	만15세이하	16~18세	19~24세	25~29세	30세이상	계	평균(세)
전체	6.4	27.5	56.0	5.1	4.9	100.0	20.2
남성	6.8	28.2	56.1	5.0	3.9	100.0	20.0
여성	0.0	16.9	54.9	7.0	21.2	100.0	24.2

자료: 보건복지부

〈표 12-11〉 노인건강 진단 실적 (2004년)

(단위: 명, %)

	전체	여성	남성	여성노인비율
계	35,293	25,944	9,349	73.5
1차 진단	27,090	19,892	7,198	73.4
2차 진단	8,203	6,052	2,151	73.8

자료: 보건복지부

〈표 13-1〉 가입유형별 국민연금 여성가입자 현황

(단위: 명)

		총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2001	전체	16,277,826	5,951,918	10,180,111	29,982	115,815
	여성	5,026,587(30.9)	1,722,525	3,227,868	25,874	50,320
2002	전체	16,498,932	6,288,014	5,704,389	26,899	179,230
	여성	5,370,163(32.5)	1,897,662	1,692,315	22,290	76,678
2003	전체	17,181,778	6,958,794	5,399,355	23,983	234,767
	여성	5,881,271(34.2)	2,225,943	1,670,233	19,148	100,121
2004	전체	17,070,217	7,580,649	9,412,566	21,752	55,250
	여성	5,918,266(34.7)	2,459,302	3,411,280	16,610	31,074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년도.

〈표 13-2〉 국민연금 수급 현황

(단위: 명, 건, %)

		전체	노령	장애	장애일시 보상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
2001	전체	955,803	602,197	27,456	2,469	145,717	171,170	6,794
	여성	41.9	28.2	10.1	8.7	92.4	53.0	32.9
	남성	58.1	71.8	89.9	91.3	7.6	47.0	67.1
2002	전체	1,059,365	717,488	32,876	2,194	171,186	129,570	6,051
	여성	40.6	27.9	10.5	10.7	92.6	50.9	34.0
	남성	59.4	72.1	89.5	89.3	7.4	49.1	66.0
2003	전체	1,177,378	819,800	39,727	2,853	198,343	109,178	7,477
	여성	39.5	27.6	10.9	9.3	92.6	42.9	35.3
	남성	60.5	72.4	89.1	90.7	7.4	57.1	64.7
2004	전체	1499,901	1,227,070	46,635	378	226,196	10,222	475
	여성	40.0	30.9	11.6	-	95.0	-	-
	남성	60.0	69.1	88.4	-	5	-	-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년도.

주: 2001-2003년 단위는 명, %이며, 2004년 단위는 건, %임.

〈표 13-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별 일반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전체	여성	남성
2001	1,345,526	778,501	567,025
2002	1,275,625	742,458	533,167
2003	1,292,690	751,457	541,233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보장 DB 통계자료실.

〈표 13-4〉 국민기초보장제도 연령별 일반 수급자 현황

(단위: %)

	여성			남성		
	0~17세	18~60세	61세이상	0~17세	18~60세	61세이상
2001	21.1	41.5	37.4	29.7	50.9	19.4
2002	20.6	40.4	39.0	29.5	50.8	19.7
2003	20.6	39.5	39.8	29.5	50.3	20.2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보장 DB 통계자료실.

〈표 13-5〉 가구유형별 일반 수급자 현황

(단위: 가구)

	전체	노인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장애인 세대	일반세대	기타
2001	698,075	237,443	13,613	70,152	19,128	100,313	217,462	39,964
2002	691,018	235,893	13,638	65,132	17,289	104,009	216,645	38,412
2003	717,861	238,790	13,932	66,636	17,158	112,987	230,827	37,531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보장 DB 통계자료실.

〈표 14-1〉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여성 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1,080	855	1,526
	농가도우미 지원	1,037	1037	1,152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	155	54	60
	여성농업인단체교육 지원	90	85	85
	식생활홍보(농소정협력사업)	345	-	-
	소 계	2,707	2,031	2,823
복지 지원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	11,880	17,716	19,384
	자영농과생 급식비	320	353	300
	대학생 학자금 융자	-	-	2,100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	-	30,221
	소 계	12,200	18,069	52,005
합 계		14,907	20,100	54,828

자료: 농림부 (2005),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 중간평가.

〈표 14-2〉 여성농업인 교육실적

(단위: 명)

	2001	2002	2003	2004
정보화교육	21,450	24,325	26,491	31,893
영농기술교육	30,594	30,801	55,603	63,531
전문농업경영교육	789	787	490	431
여성농업인교관반		24명	22명	19명

자료: 여성부(여성가족부), 『여성백서』, 각년도.

〈표 14-3〉 여성의 농협참여 추이

(단위: %, 명)

	2001	2002	2003	2004	목표치
여성조합원비율	19.6	21.2	22.6	23.6	50
여성대의원수	1,924	2,225	4,167	4,886	6,000
여성임원수	94	181	207	237	600

자료: 여성부(여성가족부), 『여성백서』, 각년도.

〈표 14-4〉 농촌여성 생활환경 개선사업 실적

	2002	2003	2004
부엌개량 및 목욕시설치 지원 (백만원)	4,200	2,656	2,391
농작업 보조기구 시범사업 (농가)	2,934	2,934	4,424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개소)	188	217	246
마을공동쉼터 설치 (개소)	250	240	237

자료: 농림부

〈표 14-5〉 연도별 농가도우미 지원실적

(단위: 명, 백만원)

합 계		2001		2002		2003		2004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10,347	3,422	1,692	550	2,452	778	2,833	892	3,370	1,202

자료: 농림부.

주: * 지원액은 국비 지원액임.

〈표 14-6〉 여성농가*인구

(단위: 명)

	15세이상인구			농가인구			농가인구 비율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2001	36,579	17,720	18,859	3,933	1,903	2,031	10.8	10.7	10.8
2002	36,963	17,921	19,042	3,591	1,748	1,843	9.7	9.8	9.7
2003	37,340	18,119	19,220	3,530	1,715	1,815	9.5	9.5	9.4
2004	37,717	18,312	19,405	3,415	1,654	1,761	9.1	9.0	9.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 주 : 농가라함은 가구주의 생업 (또는 주된 업)이 농업인 가구를 말하며, 가구주란 그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의 지출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생계책임자를 말함.